

기본연구보고서 2012-14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박노동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문

■ 서론

□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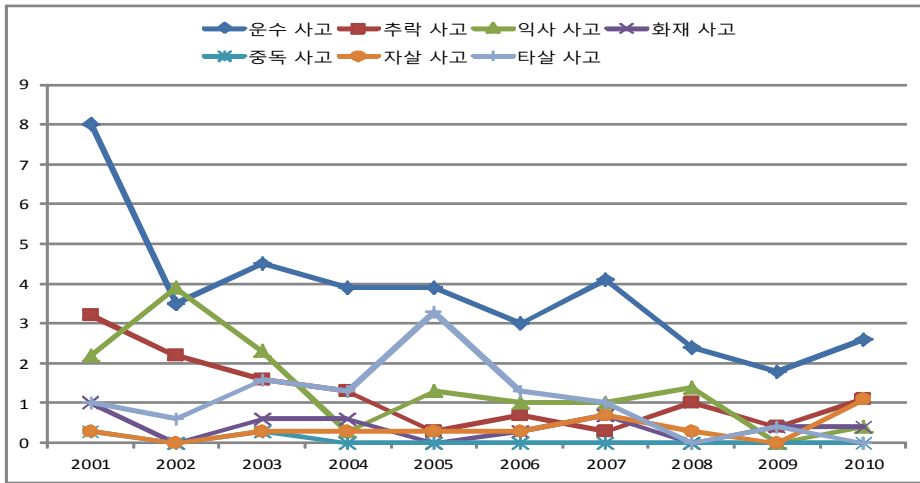
-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은 2009년 관련 조례가 마련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타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행단계에서 여전히 개별 위험에 대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추진주체의 개별화, 예방적 조치의 부족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적극적 예방조치로는 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형편
-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임
 - 어린이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
 - 어린이 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본추진방향 및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안전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목적을 둠
 - 객관적 시각에서 대전시의 현 어린이 안전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실시
 - 대전광역시 시민과 어린이의 다양한 안전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전략 및 방향 모색
 -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전형 어린이 안전도시의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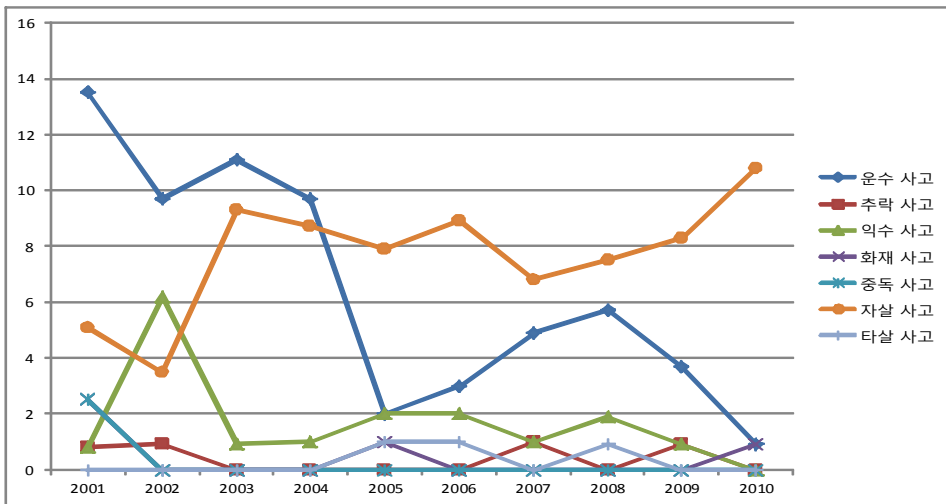
■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유형



<그림>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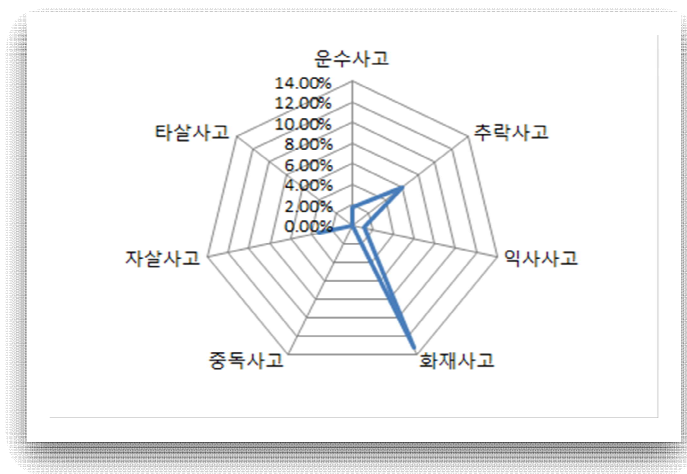
<그림>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

○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 특성

- 대전광역시 어린이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사고(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15세 미만 연령대에서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을 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육상, 수상, 항공 및 기타 포함)로 10만 명당 5.4명이 감소했고, 다음은 추락사고, 익사사고로 각각 2.1명, 1.8명 감소함
- 15세-19세의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또한 15세 미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사고의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임

○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

- 2010년을 기점으로 대전의 어린이 사고 유형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0-19세 사망자수 중 대전의 해당연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추락사고이며, 자살사고, 운수사고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타살사고와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음



<그림> 대전의 0-19세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2010)

□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결과

- 전체적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임의조항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 어린이의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져 안전에 위협을 받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영양표시도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의 경우 강제규정화 되어 있음은 일견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 법 조항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3조 시설장과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관련교육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

○ 중앙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관계 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 아동안전은 여러 부처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행정조직 대부분이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것이 문제
- 어린이 안전대책을 부처별로 추진하면서 각 과제별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중복되는 경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노정
- 아동안전사업을 아동의 권리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함. 아동사고에 대한 문제를 아동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동안 아동정책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음

- 현 어린이안전관련 사업이나 정부 시책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점.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고사망 외에 사고와 관련된 상해를 입는 아동의 수와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됨

-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대단히 미흡.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사고후 비합리적인 처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됨

○ 대전시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결과

- 그동안 대전시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자리 매김함

- 각종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 해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검토 결과

- 전체적으로 아동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부터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

-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전체적인 정책지원은 사후 처방식의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음

- 지속적인 관리·단속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활동이 관련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 체계적 사업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 아동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 확인
-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면밀한 협조 필요
- 중앙정부 정책, 대전시 정책, 국외사례 검토 결과 대전시는 향후에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칭)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사업을 기획하여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사후관리형 방식에서 예방형 체계로 전향적으로 전환
 -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
 - 어린이 중심, 사람 중심의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
 -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강화와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실천
 -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의 선진화 노력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 안전사고 경험 및 조치
 - 대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400명의 응답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가정안전사고, 놀이터사고, 자전거·인라인 사고 순으로 안전사고 경험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후 취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가족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응답자 258명 중 148명(5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관련기관에 의뢰 조치한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식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불안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유괴·살인·강도·성폭력 등의 범죄발생으로 400명 중 223명(55.8%)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의 인재가 400명 중 74명(18.5%)이 응답함
-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불안한 사고유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명 중 164명(41%)이 교통사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각종 범죄사고가 400명 중 154명(38.5%)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태도

-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전체 400명 중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으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라는 의견 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교통 혼잡 때문으로 나타남
-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전체 400명 중 217명(54.3%)은 잘 아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42.5%에 해당하는 170명은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함
-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400명 중 298명으로 74.5%를 차지함
-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400 가구 중 192가구로 48%를 차지. 어린이 긴급사고시 필요한 심폐소생술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00명 중 42.8%에 해당하는 171명으로 나타남
- 부모의 안전의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400명 중 84.5%를 차지하는 338명은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
- 하지만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0명 중 223명(55.8%)은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운데로 건너

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5%로 나타나는 등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에 대해 44.2%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높은 데 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나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식과 태도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 기존 프로그램 이용 태도

- 대전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96.3%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대전시가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385명의 응답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3%와 27.8%는 각각 가정과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전광역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75명으로 18.8%가 해당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4.5%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7.5%는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13.5%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를 차지한 것은 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교통사고 분야로 나타났고, 각종 범죄예방이 33%, 이 밖에 급식 위생, 식중독 등의 식품분야가 7.8%, 신종 전염병이 3%, 대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안전 부문이 2.8%를 차지함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어릴 때부터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으로 400명 중 157명(39.3%)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26%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 안전운전 하도록 교육·계몽 하는 것이 18.3%, 교통안전 시설의 대폭 확충이 16.3%를 차지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

-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를 1순위로 31.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선시 한 항목은 안전설비 설치 및 점검 사업과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각 19.3%와 15.8%의 응답자가 응답
-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1.25%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19.75%의 응답자가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선택했으며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도 16.25%의 응답자가 채택함
-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400명 중 154명에 해당하는 38.5%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를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27.75%의 응답자가 응답함
-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34.75%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채택률을 보인 사업은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75%의 응답자가 1순위 사업으로 채택

■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 정책 제언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 감소목표 설정

- OECD에서 권고하는 연차적 감축 안을 참조하여 목표년을 설정하고 이때까지 매년 감축목표를 조정하여 설계하며, 이에 맞추어 매년 성과평가를 해 두는 방식으로 추진

○ 안전사고 감소 추진 전략

-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정책 또한 이에 맞추어 추진
- 「시민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 프로젝트 형태의 (가칭)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역점사업 추진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표 > 종합대책 추진의 비전

비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 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달성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가정, 학교, 보육시설, 공공장소, 지역사회 및 여가 환경 등)에서 안전한 생활 유지 - 사고 위험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운택하고 즐거운 삶 향유 - 가족의 걱정 및 불안감 감소 - 사고로 인한 각계의 혼란 및 갈등 방지 -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지역경쟁력 극대화 - 사고감소를 제고(20% 감축)
정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사고예방 및 안전 인식과 참여 증진 - 어린이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어린이안전정책 기반 조성 - 기관별 부서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통합 -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 -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 주요부분별, 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 실천전략

- 어린이의 사고예방 및 안전 인식과 참여를 증진토록 어린이 안전사고 종합대책 강구
- 어린이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과 관련한 실천
-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안전정책 기반 조성
-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의 통합관리
-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향상 전략
-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사고당사자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 주요 부분별, 주요 대상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 추진방안

- 아동 안전관련 법, 제도의 통합화와 규제 강화
- 아동안전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과 중복과 혼선 조정
- 아동대상 안전사업 확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시대의 변화와 아동발달에 따른 안전 환경 조성
- 홍보강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 아동, 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 아동안전사고사례 수집을 위한 손상감시 시스템 구축
-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강화

- 선진국 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추진
- 대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통한 사고예방법 홍보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

- 안전사고 zero화 인프라 구축
 - 대전지역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사업
 - 안전사고 Zero화 Idea 공모전 (프랑스 라벨비 제도)
 - 안전사고 Zero화 민·관 협력 체계구축
- 어린이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 시민 안전 감시단 및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사업
 - 안전 생활화 작은 실천운동 전개
 - 어린이 안전 체험학교 조성사업
-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스쿨존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 선진국형 walking school bus 운영사업
 - 선진국형 Safety Village 조성사업
 -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접근 모델 검토	11
제1절 기존 논의 검토	11
제2절 상황적 예방 모델 전략	21
제3장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27
제1절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유형	27
제2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48
제3절 국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76
제4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91
제1절. 조사개요	91
제2절 어린이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93
제3절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106
제5장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123
제1절 연구 및 분석결과 종합	123
제2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131
제3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	145
제6장 결론	175
제1절 조직적 측면의 정책 제언	175
제2절 예산적 측면의 정책 제언	176
제3절 사업적 측면의 정책 제언	176
참 고 문 헌	179
부록 : 설문지	181

- 표 목 차 -

<표 1> 전국과 대전시 전체 인구 및 어린이인구 수와 비율	27
<표 2>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전국	28
<표 3>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전국	29
<표 4> 대전시 년도별, 연령층별, 성별 어린이 사망자 수	30
<표 5>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	31
<표 6>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	32
<표 7> 대전의 0-19세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2010)	33
<표 8 > 지역별 운수사고 사망률(2010)	34
<표 9 > 시·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0)	35
<표 10 > 시·도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2010)	35
<표 11> 시·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2010)	36
<표 12 >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2010)	36
<표 13 > 지역별 추락사고 사망률(2010)	37
<표 14 > 지역별 익사사고 사망률(2010)	38
<표 15 > 지역별 화재사고 사망률 (2010)	38
<표 16 > 시도별 전년대비 화재통계 (2010-2011)	39
<표 17 > 지역별 중독사고 사망률(2010)	39
<표 18 > 지역별 자살사고 사망률(2010)	40
<표 19 > 지역별 손상사망률(2010)	41
<표 20 > 지역별 비의도적 손상사망률(2010)	41
<표 21 > 지역별 타살사망률(2010)	42
<표 22 > 지역별 어린이학대 사망률(2010)	43
<표 23 > 지역별 외상성 뇌손상 사망률(2010)	43
<표 24 > 지역별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2010)	44
<표 25 > 연도 및 지역별 어린이(0-12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44
<표 26 > 연도 및 지역별 청소년(13-20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45

<표 27 > 연도 및 지역별 어린이(0-12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45
<표 28 > 연도 및 지역별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46
<표 29 > 전국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2011)	47
<표 30> 전국 실종아동 발생 건수(14세 미만 정상아동)	47
<표 31> 제 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	59
<표 32> 정부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사업수(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9
<표 33 > 안전한 대전만들기 2010 중점추진과제 및 재정투자액	66
<표 34 > 안전한 대전만들기 2010 중 어린이안전관련 중점추진과제 및 재정투자계획	69
<표 35> 설문내용	92
<표 36>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1·2·3 순위	116
<표 37>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 1·2·3 순위	117
<표 38> 안심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1·2·3 순위	118
<표 39> 손상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 사업 1·2·3 순위	119
<표 40> 사고에 따른 사망 및 부상 감소 목표	131
<표 41>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132
<표 42>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참여 대상 범위	136
<표 43>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수행 방법	137
<표 44> 종합대책 추진의 비전	138
<표 45> 대전지역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 연차별 추진계획	147
<표 46> 안전사고 Zero화 아이디어 공모전 연차별 추진계획	149
<표 47> 안전사고 Zero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151
<표 48> 시민 안전 감시단 및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53
<표 49> 안전 생활화 작은 실천운동 전개 연차별 추진계획	156
<표 50> 어린이안전체험학교 조성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60
<표 51> 스쿨존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64
<표 52> 선진국형 walking 스쿨버스 운영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67
<표 53> 선진국형 safety village 조성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70
<표 54>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72

- 그림 목 차 -

<그림 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7
<그림 2> 15세 미만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29
<그림 3> 15세-19세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29
<그림 4>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	31
<그림 5>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	32
<그림 6> 대전의 0-19세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2009)	33
<그림 7> 지역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변천	62
<그림 8> 안전관리 위원회 추진체계	64
<그림 9> 안전관리사업 추진체계	65
<그림 10> 송파구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네트워크 체계	74
<그림 11> 송파구의 안전도시 추진체계	74
<그림 12> 송파구 어린이 손상감시 체계	75
<그림 13> 안전사고 발생률	93
<그림 14> 사고 발생후 조치	93
<그림 15>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우선순위	95
<그림 16> 어린이 안전사고 불안율	95
<그림 17> 학교 및 시설 급식 불안도	96
<그림 18>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요인	96
<그림 19> 자연재해 안전의 불안도	97
<그림 20> 건축물 및 시설물 불안도	97
<그림 21> 교통사고 안전의 불안도	98
<그림 22> 화재에 대한 불안도	98
<그림 23>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도	98
<그림 24>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99
<그림 25>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도	100
<그림 26>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도	100

<그림 27> 폭력, 강도, 유괴 등의 불안도	101
<그림 28>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인식	101
<그림 29>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 정도	102
<그림 30> 자녀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부	102
<그림 31> 가정 내 소화기 비치여부	103
<그림 32> 심폐소생술법 인지여부	103
<그림 33> 부모로써 안전의식 정도	104
<그림 34> 횡단보도 안전횡단법 인지여부	104
<그림 35>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104
<그림 36> 대전시 안전 프로그램 이용여부	106
<그림 37>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은 이유	107
<그림 38> 미아찾기 프로그램 인식도	108
<그림 39> 친환경어린이집 인식도	109
<그림 40> 스쿨푸드존 인식도	109
<그림 41> 불량식품감시단 인식도	110
<그림 42>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센터 인식도	110
<그림 43> 어린이 식습관개선 프로그램 인식도	111
<그림 44> 고당식품 알리미 프로그램 인식도	111
<그림 45> 스쿨존 프로그램 인식도	112
<그림 46>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인식도	112
<그림 47> 놀이시설 안전기준 인식도	113
<그림 48>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113
<그림 4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역점분야	114
<그림 50>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역할	114
<그림 51>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역점사항	115
<그림 52> 안전문화의 3대 원칙	134
<그림 53> 안전문화의 3대 축	134
<그림 54> 스쿨존 안전성 평가 모형도	162
<그림 55> Spider-map 안전성 평가 모델 사례	163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어린이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가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는 여전히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대책 마련에 따른 효과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안전사고 실태 파악을 보면, 전국의 병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안전사고 유형별 즉, 익사, 자살, 교통, 식품, 보건, 미아 등에 대해 개별적인 대책 수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은 2009년 관련 조례가 마련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타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여전히 개별 위험에 대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추진주체의 개별화, 예방적 조치의 부족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적극적 예방조치로는 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건유형 중심보다는 어린이가 주로 보내고 있는 곳 즉, 행동반경을 중심

으로 한 지역중심의 근본적인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률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들 지역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고나 범죄 방지를 위한 접근 방안은 사고유형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지역환경이나 공동주택 또는 도시지역 등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린이안전 사고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선진국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 예방’을 통해 도시계획이나 공동주택개발 등을 수행할 때 사고와 범죄방지를 위한 설계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점은 미아·실종, 어린이 피해 범죄, 교통사고 빈번 등이 지자체 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과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고전적인 재난관리 체계로는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년 10월 9일 전국 최초의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우선순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 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본추진방향 및 지역사회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안전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대전이 지니고 있는 신중심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상상력과 창조성을 융합하여 어린이 안전 종합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시 어린이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한다.

상기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객관적 시각에서 대전시의 현 어린이 안전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방향을 타진하고, 대전광역시 시민과 어린이의 다양한 안전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전략 및 방향을 모색토록 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전형 어린이 안전도시의 방향을 설정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대전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전시의 비전과 목표를 발굴, 제시한다.

도시의 안전성 요구 및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에 따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린이 안전도시 육성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 미주, 일본 등 외국의 어린이 안전도시들에 대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전략도 동시에 마련한다.

대전시를 삶의 질이 높은 어린이 안전 수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핵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절실하기 때문에, 핵심 선도 사업은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 환경을 극대화하고, 대전 시민들이 어린이 안전 수범도시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발굴하여 제시토록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안전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 실태 분석, 시사점 검토, 시민의 의견 수렴의 단계를 거쳐, 최종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방안의 골격을 그리고 이를 정책과제화 하는 식으로 연구절차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추진현황을 중앙부처와 대전광역시의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대전시민(학부모)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련 의식, 정책요구 조사를 수행하고, 생성된 자료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어린이 안전관리 대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는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우선, 어린이 안전관리 시책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정책 추진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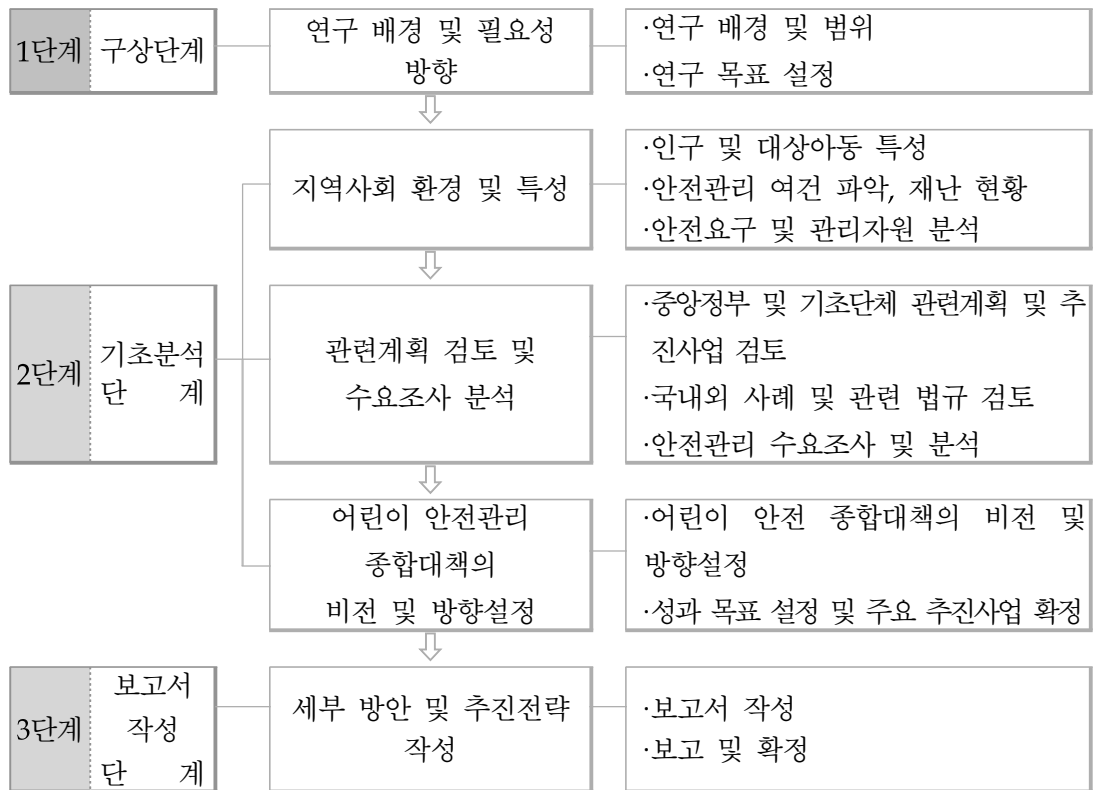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어린이안전관리 정책수요발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시코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

를 심층 분석하여,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을 규명코자 하였다.

또한 국외의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조사를 통하여 대전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였으며,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장·단기 전략 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전체 분석은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실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일련의 연구과정은 아래와 같은 논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림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제 2 장

선행연구 및 정책접근 모델 검토

제1절 기존논의 검토

제2절 상황적 예방모델 전략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접근 모델 검토

제1절 기존 논의 검토

1. 안전 개념

안전이란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의 안전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을 의미한다면 보다 포괄적 의미의 안전 속에는 신체적, 심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안전은 위험의 영역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세계은행은 위험의 영역으로 1) 자연재해 위험, 2) 건강위험, 3) 생애위험, 4) 사회위험, 5) 경제적 위험, 6) 정책/정치적 위험, 7) 환경위험 등으로 나누고, 수준별로는 1) 미시적, 2) 중범위적, 3) 거시적 위험으로 나누고 있다(Rober & Jorgensen, 2006). 여기에서 생애위험은 미시적인 개인수준에만 해당하며, 자연재해나 환경위험은 최소한 중범위 수준 혹은 거시적 수준의 위험으로 정의된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위험을 영역에 따라 1) 지구적 생태위험, 2) 자연재해위험, 3) 국가적 안보위험, 4) 건강의 위험, 5) 경제적 생계위험, 6) 기술적 재난위험, 7) 사회적 해체위험 등으로 나누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예방의 가능성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을 분류하여 재난위험, 생활안전, 자원위기, 질병위험, 범죄위험, 사회문제, 핵위험 등으로 나누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17).

일반적인 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크게 홍수, 먹거리 등과 같이 자연적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교통사고 등과 같

이 인간의 인위적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인위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두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달은 많은 기계와 설비의 개발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사회의 복잡성과 위험성은 증가되어 많은 사고발생과 더불어 인명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사고란 ‘알아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 사건’ 이라 하고, 미국안전협회(NSC)는 ‘인간에게 상처 또는 사망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결과’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는 어린이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에 오는 15세 이하 환자 5명 중 1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교통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김신정, 2001).

한혜경(1997)에 따르면, 안전사고에 대비되는 어린이안전이란 ‘어린이가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 을 의미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어린이안전이란,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도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어린이안전정책은 확대받거나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어린이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일찍이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실시된 어린이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7)이 새로운 법령으로 제정되고, 예산규모도 2003년(1523억)에 비해 2007년(2746억)에는 80.3% 증액되었다. 또, 아동·청소년안전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통계자료들은 과거에 이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된 국가통계는 보건복지가족부등 정부부처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민간통계가 폭넓게 구축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물리적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유형 및 실태분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별, 유형별로 실태를 나열하는 정도이다.

한혜경(1997)은 어린이안전사고발생현황을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과 영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한국 1,958명, 일본 1,125명, 영국 404명), 교통사고, 화재, 익사, 추락사고 등 사고별 사망률을 비교하였을 때 교통, 익사사고 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정근(1998)은 학교안전사고증가추세에 따라 학교안전실태를 학급별, 사고원인별, 유형별 로 분석하고 실습과 현장학습 등에서의 사례들을 기술하여 사건사고별로 분석하여 사고를 감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2005)결과를 보면, 0-14세 어린이 환자 수는 22.3%(1,739명)로 주로 운수, 추락 사고를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증도가 더 크게 나타나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14세 어린이사망은 10만 명당 8.3명, 입원은 834.1명, 1-17세 아동·청소년은 1,139명으로 전체연령대의 사망률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2007)는 사고유형별 통계현황을 분석하면서 사례를 가지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안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대체로 실태조사에 관심을 둔 경우가 많았고(박영신, 2003), 어린이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송현중, 2006). 지적하듯이 어린이 사망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해 어린이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 추세는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실태 및

통계자료마련에 노력해왔지만, 단순한 분석 뿐 아니라 유형별 대책마련 등의 실태 자료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이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유형에 따라 대책을 분석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안전사고유형을 이해하고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 재발 방지를 감시하는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권기창 외, 2006).

어린이안전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지표개발과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내 통계 및 대책마련에 대한 평가 분석을 위한 평가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제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어린이안전사업에 대한 추진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가개별부처 및 NGO단체 등에서 수행되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과 사고유형별, 연령별,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의 환경별로 어린이안전사고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사연구전담조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김승권외, 2008; 송현중, 2006; 권기창외, 2006)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다.

통계청 사망통계자료(2005)에 의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사고로 가장 흔한 유형은 교통사고(47.2%, 4,458명)로 이는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였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의 교통사고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행 중 사망아동은 74.7%, 부상자는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아동 사망자의 사고발생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 전 어린이는 집에서 100M 이하, 초등학생은 500M1,000M이하, 중학생은 500M 이하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교통수단이 대부분 보행임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놀이를 위한 공원접근, 학원통행 등 어린이의 일상적인 통행 루트를 고려하여 보행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김승준, 2007).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슬로우 캠페인 조사(2007)에서도 전국 초등학생 24.8%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교 시 평소에 비해 2.4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소별로는 집주변이 53.1%, 학교주변이 39.5%로 파악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 결과에서도 14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사고는 60.8%, 6세 이하 어린이는 82.3%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 내, 학교영역의 안전사고유형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 학교 내 영역은 장소별 가장 높게 발생하는 어린이안전사고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영역은 매우 광범위함으로 협의의 어린이안전 개념을 채택하여, 주요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의 행동반경이 집주변(Home Zone), 학교주변과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학교 내 취약지역, 지역사회에 머무른다는 것을 전제한다.

2. 어린이 안전과 지역사회

위험은 더 이상 특정지역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지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점점 더 비가시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심영희, 1998). 국제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문제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안전사고 및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송현중, 2006), 민간과 정부의 공동 활동으로 어린이 및 안전사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권기창, 2006).

스웨덴은 어린이사고방지를 위한 합동위원회(Swedish Joint Committee on Childhood Accident Prevention)를 설치하여, 안전관련 사고와 지식, 관심을 증대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환경위원회(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를 설립(1981년)하고, 법률재평가작업(Berfenstam & Soderquist, 1991)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마련과 아동안전법규강화에 기여하였다. 현재는 유럽아동안전연맹

(European Home Safety Alliance)설립하여 유럽회원 27개국들로부터 어린이안전정보와 실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김승권외, 200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어 역사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EU국가가 함께 통일된 내용과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윤선화, 2003).

미국은 주정부차원에서 아동안전네트워크(Child Safety Network) 전국 상해폭력방지자원센터(National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Resource Center)를 설립하고, 연방정부에서는 미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산하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를 설립하여(Sleet, Bonzo, & Branche, 1998) 이분화된 어린이·청소년 안전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안전네트워크(CSN)에서는 각종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과 정책 활동, 그리고 주 및 지방 안전담당자를 대신하여 연방기관 내에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윤선화, 2003).

영국에서는 ‘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이라는 공중보건전략의 중점관리 분야에 사고를 포함하였다. 2004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도로교통안전’으로 선정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사업전략을 발표하여,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장기간의 역학적 모니터링,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예방중재프로그램 개발, 도로교통안전 관련 연구의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송현중, 2006). 또한 김승권외(2008)에서는 부모, 가족,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강조하고 지표 및 점검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스웨덴, 미국, 영국등과 같은 선진외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해준다.

반면, 기존의 연구들은 선진 외국의 어린이·청소년 안전관련 법과 정책을 객관적

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거나 교통안전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국내의 상황에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용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분석 중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 및 우리나라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사고유형별 대책을 시사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시정개발연구원(2007)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집주변(Home Zone)의 기본원리를 ‘거주민들의 거리’로 정하여 거기를 단지 교통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 놀이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차량중심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자 약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아동단체협의회 자료(200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Pennsylvania주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최고속도인 17.6km를 넘으면 최고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자에게 벌점 3점을 주고, 두 번째 위반시는 두 달간의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California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관련 현행법은 스쿨버스 정차 시 정지 사인(Sign)판이 튀어나와 뒤따르던 차량은 물론 반대 차선을 달리던 차도 멈춰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천 달러를 물고 1년간 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등 국내에 비해 통학로 교통안전정책이 강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청소년 안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 안전사고유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문헌 분석

현재 문헌에서 나타난 어린이 사고발생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물리 환경적 요인, 교육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찰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개인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었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 성격 및 태도, 주의집중력 정도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Heinirch 등(1980)은 사고는 골짜기 구조가 무너지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고 연쇄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가졌고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 결함으로 이어져 주변의 불안정한 상태와 맞물려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고 발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향이 크므로 개인적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하거나 제거하면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지미영, 2000).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고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적요인으로 성별 및 연령을 들 수 있다. 즉, 사고는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게 나왔으며(이명선 등, 2006),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연구(지미영, 2000; 이형엽, 2002; 이명선, 2003; 이혜진, 2007)에서도 남학생이 높게 나왔다. 이혜진(2007)에 의하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생 비율이 7:3으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고의 발생률은 고학년일수록 높았고(전춘옥, 1997; 정우승, 2005; 이혜진, 2007), 손상의 정도도 심했다. 이는 신체의 성장발달에 따라 신체활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독립심이나 모험심이 증가하는 등 정서적인 영향에 의한 행동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의 인적요인 중 개인의 성격 역시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고의 성격 특성이나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는 1900년대 초기부터 연구되어져 왔으며(이형엽, 2002),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50.7%에 해당하는 학생이 급한 성격을 나타냈고(권상도, 1991), 이는 적극적인 성격성향과 급한 성격성향을 가진 학생에게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미영(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주형 등(2002)에 의하면 주의집중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선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성, 조급함, 절제성 등으로 구성된 사고발생과 관련된 성격 성향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사고경향 성격점수가 성인기와 노인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손상발생은 충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인(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내용의 실천 정도가 낮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안전관심 정도가 낮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경험이 있는 어린이일수록 위험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지역사회 분위기나 지원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김복주 등(2001)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과 부모의 학력 등과 아동의 사고발생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주형 등(2002)도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고발생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호주 타스마니아 아동사고 예방연구소의 손상자료를 분석한 손인아(2001)에 의하면 어린이 사고발생 관련요인으로 가족구조 및 유대관계, 생활방식, 위험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구조, 어린이의 사회화 특히 양육 방식에 대한 가치와 신념, 개인의 태도나 성격 등을 꼽아서 가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부각시켰다. 이는 어머니의 안전행동은 자녀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김주형 등(2002)의 연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김선연(200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률이 높았으며, 가족분위기가 나쁠수록 충동적이고 신경증의 점수가 높았다.

교육적 요인은 역시 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성현(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교육의 이해도는 사고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사고발생빈도는 더 낮았다. 모든 문헌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받은 학생들의 지식, 태도,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이 안전행동 실천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함께 사고발생에 촉매역할을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 중 인적원인은 78.9%, 환경원인 8.6%으로 나타났다(박성은, 2001).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소재지 별로 인적, 물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로 갈수록 사고발생률은 줄어들었으며 소도시로 갈수록 물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과 학교내의 물리적·환경적 위험요인들이 아동의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강희숙(1994)의 연구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학교, 집근처,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사고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고 빈발 장소로 가정 및 학교를 꼽았다(김복주, 2001; 김소선·이은숙, 1999; 이수정, 1997). 따라서 아동의 사고 예방과 관련된 변으로서 시설과 설비, 물품을 통한 안전한 환경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상황적 예방 모델 전략

1.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상황적 예방 모델 적용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인 대전시 지역의 특성과 유형, 대전시 거주 어린이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적 예방 모델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연관된 위험을 파악해 내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환경 중 가정 이외의 장소(예: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센터, 종교 단체, 스포츠 프로그램, 의료 시설 및 재활 시설 등)라는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어린이에게 본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과제의 접근 모델로서 매우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접근 모델이 각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다른 예방법이 새로이 도입될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적 예방 모델 역시 다양한 조직, 단체, 기관 등에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현장 중심의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2. 상황적 예방 모델 적용의 절차와 단계

위험을 측정하고 적절한 위험 예방 및 감소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상황적 예방 전략은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사회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3) 개별 위험요인 별로 효율적인 예방 및 감소 전략을 채택한다. (4) 위험 감소와 예방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제안된 방안을 실행한다. (6)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

키고 지속해 나간다. 각각의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일부 단계의 경우 실시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이러한 상황적 예방 모델 적용시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논리적 절차 순서에 따라 설명토록 한다.

1) 초기 위험 평가 실시

기초적인 자료를 통하여 상황적 예방모델의 각 구성요소 (예: 생활방식 및 일상적 활동; 물리적 환경; 피해자의 특징; 목표장소; 조장 요인; 조직 분위기; 범죄자 특정 요소)와 연관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의 연구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2) 핵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들이 파악되면 각 요인 별로 중요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대상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우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AHP방식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우선 및 핵심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개별 위험요인 별 효율적인 예방 및 감소 전략 채택

이 단계에서는 파악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경우에 있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어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위협의 우선순위 결정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위협요인, 잠재적인 위협 감소 및 예방 전략, 각각의 방식마다 요구되는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한다. 각각의 모델 구성요소 별로 위협 및 개입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모델의 구성 요소 전체 차원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부 연관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공동차원의 대응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시 대응 가능한 위협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 대응을 차후로 미루는 것이 보다 나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위협의 심각성, 문제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5) 계획한 위협 감소 및 예방전략의 실행

선택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의 테스트를 거친 이후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복수의 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의 실행과 이로 인한 일차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한 보고의 과정이 뒤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 자원 봉사자, 해당 기관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 변화를 도입할 때에는 수정에 앞서 변화가 “자리잡기” 까지 일정 기간 기다려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다.

6)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든 조직 내의 변화 전략에는 평가와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

은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에는 평가의 실시 시기와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다음 의사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평가 전략은 수많은 위험 감소 및 예방 전략 중에서도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처럼 전문가와 상의할 경우 최소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바탕이 될 다년간에 걸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의 조직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및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보다 효율적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는 이점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피드백을 통해 개입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프로그램의 안전성, 만족도, 전체적인 효율성 입증에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 평가 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적인 기부 및 지원의 당위성 입증에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존재한다.

3. 상황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수행의 적합성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고, 지역사회에 종합적 대책으로서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논의한 연구결과들과 관련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분석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 적용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어린이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살펴 볼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당사자 및 가족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성별, 가족관계, 가정경제, 부모학력, 부모직업유무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지역특성에 한 변수로 고려해 둘 것이다.

제 3 장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제1절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현황

제2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제3절 국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제3장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제1절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유형

1. 대전시 어린이 인구 현황

대전시 어린이 인구는 1990년 총인구대비 38.1%로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어린이 인구 비율이었으나, 이후 년도 별 추세를 보면 점차 구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매년 감소추이를 보이는 대전시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구성 비율에 있어 1995년 34.0%, 2000년 31.2%, 2005년 27.7%, 2010년 25.0%로 나타나,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여 6.2% 감소하였다. 전국 어린이 인구 비율이 2000년 대비 2010년에 5.9% 감소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대전의 어린이 인구 비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전국과 대전시 전체 인구 및 어린이인구 수와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국			대전시		
	총인구	어린이인구 (0-19세)	어린이인 구비율(%)	총인구	어린이인구 (0-19세)	어린이인구 비율(%)
1990	43,390,374	15,583,211	35.9	1,049,112	400,085	38.1
1995	44,553,710	14,098,995	31.6	1,270,873	432,101	34.0
2000	45,985,289	13,330,340	29.0	1,365,961	425,706	31.2
2005	47,041,434	12,086,651	25.7	1,438,551	398,251	27.7
2010	48,874,539	11,309,174	23.1	1,515,084	378,282	25.0
2015	49,277,094	9,866,087	20.0	1,554,726	342,593	22.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0-2005), 장래인구추계

2.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전반적 특성

이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공식통계자료를 토대로 요인별 어린이 사망률 추이를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자료(2012)에 따르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사고(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00년 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안전사고로 19세까지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2,750명에서 2010년 1,33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68.7명에서 2007년 61.7명으로 감소하였다. 15세 미만 연령대에서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육상, 수상, 항공 및 기타 포함)로 4.9명이 감소했고, 다음은 익사사고, 추락사고로 각각 2.4명, 1.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15세-19세의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또한 15세 미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전국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2001	7.3	1.6	3.1	0.4	0.1
2002	6.2	1.4	2.4	0.7	0.1
2003	6.0	1.4	2.0	0.5	0.1
2004	5.1	1.1	1.6	0.6	0.0
2005	3.9	0.9	1.9	0.4	0.1
2006	3.6	0.7	1.7	0.2	0.0
2007	3.5	0.6	0.9	0.5	0.1
2008	2.9	0.7	0.9	0.1	0.0
2009	2.5	0.6	0.9	0.2	0.0
2010	2.4	0.5	0.7	0.1	0.1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조사(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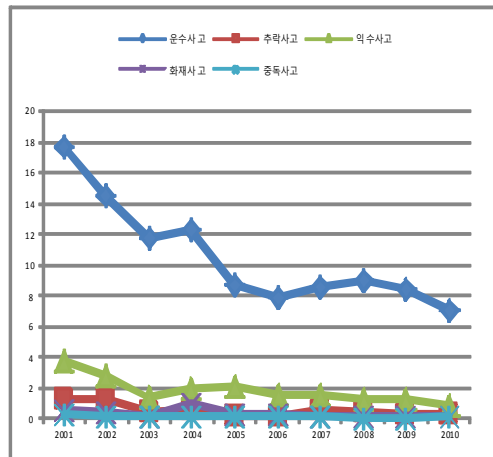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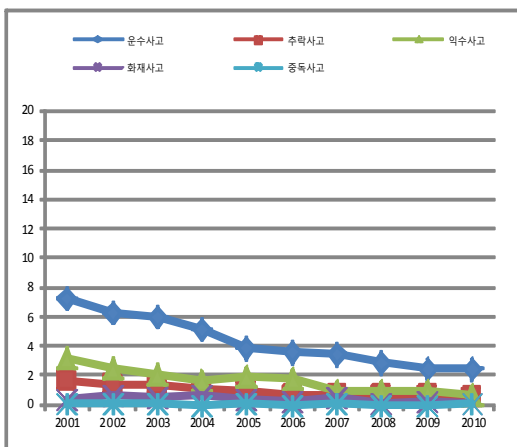
<표 3>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전국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수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2001	17.7	1.3	3.7	0.5	0.3
2002	14.5	1.2	2.8	0.4	0.1
2003	11.7	0.4	1.4	0.2	0.1
2004	12.3	0.6	1.9	1.0	0.1
2005	8.7	0.2	2.1	0.3	0.2
2006	7.9	0.2	1.5	0.3	0.1
2007	8.5	0.6	1.5	0.1	0.1
2008	9.0	0.4	1.3	0.2	0.0
2009	8.4	0.3	1.3	0.2	0.0
2010	7.0	0.3	0.8	0.1	0.1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조사(2012)

연령별 특성을 보면, 15세 미만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과 15세-19세의 사망률의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정사고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세-19세의 운수사고 사망률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15세 미만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그림 6> 15세-19세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다음으로 대전시의 사고에 따른 어린이 사망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으며 특히 0-4세 어린이의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전시 10-19세 남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20%가 넘고, 여자 어린이 15-19세 사망률은 25%에 달한다.

또한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자료(2012)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어린이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사고(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5세 미만 연령대에서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을 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육상, 수상, 항공 및 기타 포함)로 10만 명당 5.4명이 감소했고, 다음은 추락사고, 익사사고로 각각 2.1명, 1.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19세의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또한 15세 미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사고의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4> 대전시 년도별, 연령층별, 성별 어린이 사망자 수

성별	연령	2007	2008	2009	2010
계	0-4세	84	85	56	57
	5-9세	20(19.4%)	17(17.2%)	8(8.5%)	17(19.1%)
	10-14세	13(11.3%)	8(7%)	13(11.4%)	20(18%)
	15-19세	29(28.2%)	28(26.4%)	24(22%)	25(22.4%)
남	0-4세	48	50	32	29
	5-9세	12(22.3%)	8(15.5%)	2(4.1%)	13(28%)
	10-14세	9(14.6%)	5(8.2%)	7(11.6%)	12(20.5%)
	15-19세	18(32.8%)	19(33.6%)	20(34.4%)	12(20.2%)
여	0-4세	36	35	24	28
	5-9세	8(16.2%)	9(19.1%)	6(13.4%)	4(9.4%)
	10-14세	4(7.4%)	3(5.6%)	4(11.2%)	8(15.2%)
	15-19세	11(22.9%)	9(18.2%)	4(7.9%)	13(25%)

주) 사망률 연령 급간은 1-4세로 조사되어 사망률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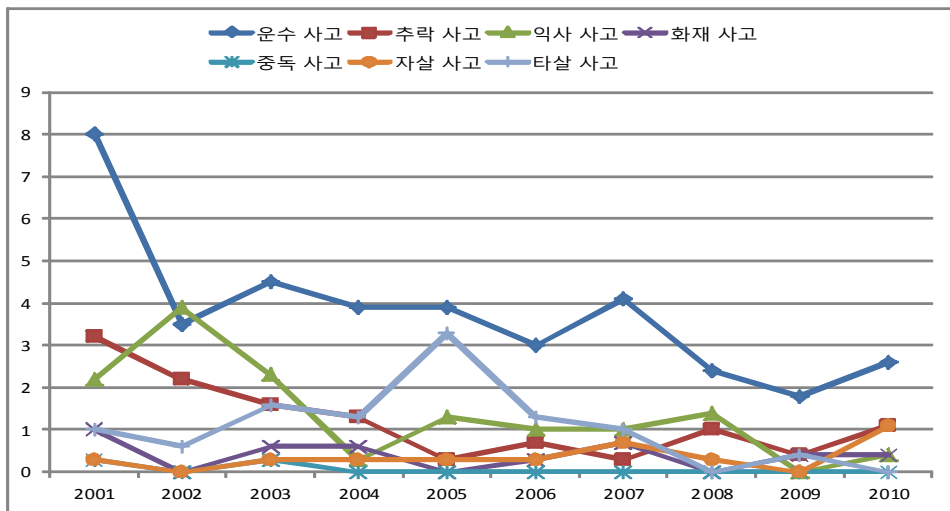
연령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과 15세-19세의 사망률의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정사고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세-19세의 운수사고 사망률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사고	타살 사고
2001	8.0	3.2	2.2	1.0	0.3	0.3	1.0
2002	3.5	2.2	3.9	0	0	0	0.6
2003	4.5	1.6	2.3	0.6	0.3	0.3	1.6
2004	3.9	1.3	0.3	0.6	0	0.3	1.3
2005	3.9	0.3	1.3	0	0	0.3	3.3
2006	3.0	0.7	1.0	0.3	0	0.3	1.3
2007	4.1	0.3	1.0	0.7	0	0.7	1.0
2008	2.4	1.0	1.4	0	0	0.3	0
2009	1.8	0.4	0	0.4	0	0	0.4
2010	2.6	1.1	0.4	0.4	0	1.1	0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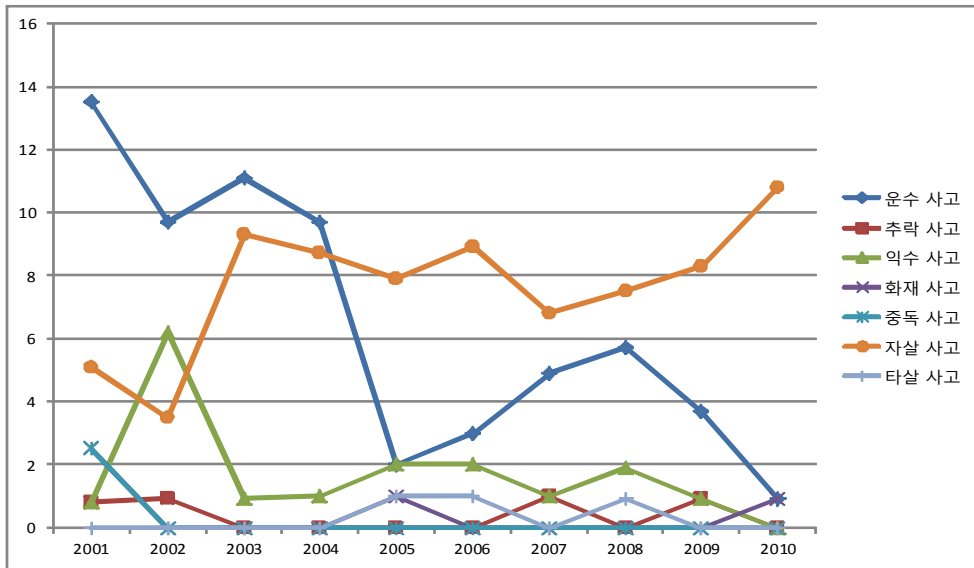
〈그림 7〉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 미만) 사망률 추이

<표 6>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익수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사고	타살 사고
2001	13.5	0.8	0.8	2.5	2.5	5.1	0
2002	9.7	0.9	6.2	0	0	3.5	0
2003	11.1	0	0.9	0	0	9.3	0
2004	9.7	0	1.0	0	0	8.7	0
2005	2.0	0	2.0	1.0	0	7.9	1.0
2006	3.0	0	2.0	0	0	8.9	1.0
2007	4.9	1.0	1.0	0	0	6.8	0
2008	5.7	0	1.9	0	0	7.5	0.9
2009	3.7	0.9	0.9	0	0	8.3	0
2010	0.9	0	0	0.9	0	10.8	0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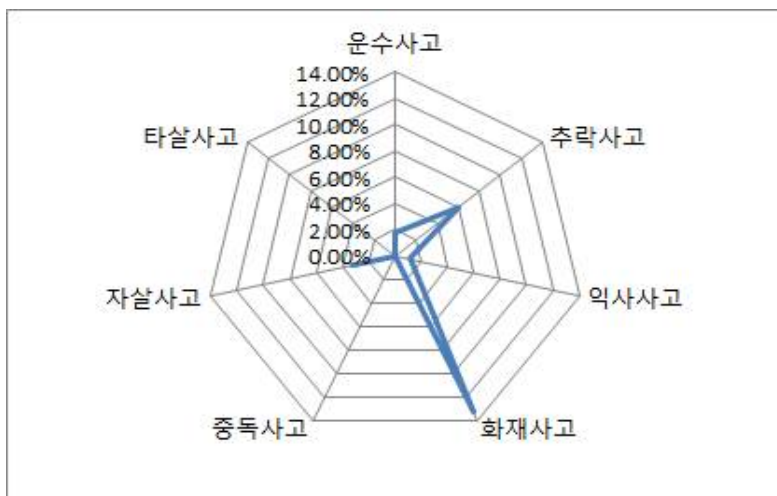
<그림 8> 대전광역시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15세-19세) 사망률 추이

2010년을 기점으로 대전의 어린이 사고 유형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0-19세 사망자수 중 대전의 해당연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추락사고이며, 자살사고, 운수사고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타살사고와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7> 대전의 0-19세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2010)

	전국 사망자수	대전 사망자수	비중
운수사고	443	8	1.8%
추락사고	50	3	6.0%
익사사고	90	1	1.1%
화재사고	15	2	13.3%
중독사고	7	0	0.0%
자살사고	450	15	3.3%
타살사고	106	0	0%

주) 비중 : $\frac{\text{대전의 사망자수}}{\text{전국의 사망자수}} \times 100$



<그림 9> 대전의 0-19세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2009)

3. 사고 유형별 피해 특성

아래에는 각각의 사고유형별 특성을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는 2011년 실태조사를 참조하였다.

1) 교통사고

2010년 현재 운수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1-14세 어린이의 경우 전국 평균 10만 명당 2.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19세까지를 포함한 어린이의 경우 전국 평균 10만 명당 3.9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광역시 별로 비교해 보면 1-14세 어린이는 광주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1-19세 어린이는 광주가 10만 명당 4.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8 > 지역별 운수사고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22	1.6	48	2.2
부산	9	2.0	26	3.3
대구	8	2.1	23	3.6
인천	6	1.6	19	2.8
광주	10	2.9	16	4.5
대전	7	2.7	8	2.3
울산	2	0.9	8	2.4
전국	195	2.4	437	3.9

출처 : 통계청

2010년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8,09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5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22,257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과 대구의 발생건수가 높고, 대전과 울산은 비교적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9 > 시·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0)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전국	18,092	100	154	100	22,257	100
서울	2,620	14.5	14	9.1	2,961	13.3
부산	870	4.8	6	3.9	1,034	4.6
대구	1,046	5.8	5	3.2	1,208	5.4
인천	830	4.6	5	3.2	979	4.4
광주	756	4.2	3	1.9	916	4.1
대전	496	2.7	6	3.9	605	2.7
울산	384	2.1	2	1.3	459	2.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시·도별로 14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상자를 살펴보면 대전은 2010년 기준으로 2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 시·도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2010)

구분	어린이 보행사상자		
	사망자 (명)	점유율	부상자 (명)
전국	96	1.6	8,616
서울	10	2.0	1,498
부산	6	2.4	537
대구	3	1.4	523
인천	0	0.5	449
광주	2	1.7	569
대전	2	1.5	250
울산	1	0.9	192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시·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서 총 3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382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고는 서울과 부산이 42건 씩 발생했고, 다음으로 대전이 34건 발생하였다.

<표 11> 시·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2010)

구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전국	382	13	554
서울	42	3	48
부산	42	0	57
대구	14	0	14
인천	16	1	26
광주	11	0	20
대전	34	2	49
울산	6	0	12

출처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4세 이하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총 1,70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대전에서는 66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1명, 부상자 92명으로 타 광역시에 비하여 중간 정도의 발생 및 손상률을 보이고 있다.

<표 12 >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2010)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4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2세 이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국	1,706	39	2,241	535	7	560
서울	352	3	464	82	2	86
부산	130	2	154	42	1	42
대구	93	1	130	32	1	37
인천	62	0	82	27	0	27
광주	101	0	139	27	0	30
대전	66	1	92	26	0	27
울산	31	1	34	11	0	11

출처 : 도로교통공단

2) 추락사고

추락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2010년 10만 명당 1-14세 어린이 0.5명, 1-19세 어린이 0.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대전은 1-14세 어린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지역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추락 사고는 1-19세 어린이 보다 상대적으로 1-14세 어린이에게 더 자주 발생하였다.

<표 13 > 지역별 추락사고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4	0.3	6	0.3
부산	3	0.8	3	0.6
대구	1	.04	1	0.3
인천	1	0.3	2	0.4
광주	1	0.6	3	0.9
대전	3	1.2	3	1.0
울산	0	0.0	0	0.0
전국	36	0.5	47	0.4

출처 : 통계청

3) 익사사고

2010년 어린이 사망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0.8명의 어린이가 익사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구 10만 명당 1-14세 어린이 0.4명, 1-19세 어린이 0.3명이 익사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사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평균보다 더 높은 광역시로는 광주광역시(어린이 10만 명당 약 2명)가 유일하다.

<표 14 > 지역별 의사사고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6	0.4	8	0.4
부산	1	0.2	3	0.4
대구	2	0.6	2	0.5
인천	1	0.2	4	0.6
광주	5	2.0	7	2.0
대전	1	0.4	1	0.3
울산	1	0.5	1	0.4
전국	62	0.8	90	0.8

출처 : 통계청

4) 화재사고

2010년 어린이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10만 명당 1-19세 어린이 0.1명이 화재로 인한 질식·화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인 어린이 10만 명당 1-14세 어린이 0.3명, 1-19세 어린이 0.5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부산과 대전, 울산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5 > 지역별 화재사고 사망률 (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0	0.0	1	0.0
부산	2	0.8	2	0.4
대구	0	0.0	1	0.1
인천	1	0.1	1	0.1
광주	0	0.0	0	0.0
대전	1	0.3	2	0.5
울산	1	0.3	1	0.3
전국	10	0.1	15	0.1

출처 : 통계청

<표 16 > 시도별 전년대비 화재통계 (2010-2011)

구분	11. 3월					10. 3월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천원)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합계	14,589	556	96	460	78,760,976	11,293	580	111	469	70,409,249
서울	1,525	48	8	40	3,485,375	1,462	82	15	67	4,048,652
부산	896	42	11	31	1,590,697	637	31	7	24	1,194,190
대구	655	23	3	20	2,564,190	503	20	5	15	1,140,551
인천	549	43	3	40	3,831,000	459	22	4	18	2,573,576
광주	436	9	1	8	1,201,795	331	7	1	6	788,503
대전	416	7	1	6	1,274,073	333	15	2	13	1,465,533
울산	513	25	5	20	1,075,887	332	18	0	18	881,148

출처 : 소방방재청 인명피해 대상 : 전 연령층

5) 중독사고

2010년 어린이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10만 명당 1-19세 어린이 0.1명이 중독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중독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2009년에는 없었으며,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광역시는 대구로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0.6명이 사망했으며, 1-19세 인구는 10만 명당 0.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 지역별 중독사고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0	0.0	0	0.0
부산	0	0.0	0	0.0
대구	3	0.6	3	0.5
인천	0	0.0	0	0.0
광주	0	0.0	0	0.0
대전	0	0.0	0	0.0
울산	0	0.0	0	0.0
전국	5	0.1	7	0.1

출처 : 통계청

6) 자살사고

2010년 어린이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았을 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14세 어린이 구간보다 1-19세 어린이 구간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1명 꼴로 자살로 인해 사망했으며, 1-19세 어린이 10만 명당 4명 꼴로 자살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대전에서는 2010년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0.9명이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며, 1-19세 어린이는 10만 명당 3.4명이 자살하여 사망 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18〉 지역별 자살사고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9	0.5	77	3.0
부산	9	2.1	36	3.9
대구	7	1.3	31	4.1
인천	3	0.5	22	2.7
광주	7	3.0	19	4.2
대전	3	0.9	15	3.4
울산	5	2.0	11	3.2
전국	81	1.0	450	4.0

출처 : 통계청

7) 손상사망

2010년 지역별 손상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14세 어린이 6.7명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세 어린이는 10만 명당 10.6명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대전에서 손상으로 인해 2010년 사망한 1-14세 어린이는 6.6명 발생하였으며, 1-19세 어린이 중에서는 9.5명이 사망하였다. 손상으로 인한 1-19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0만 명당 14.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 지역별 손상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69	4.5	181	8.3
부산	33	6.2	74	9.6
대구	20	4.7	44	7.2
인천	26	5.5	59	8.9
광주	18	6.4	56	14.5
대전	18	6.6	36	9.5
울산	13	6.1	25	8.5
전국	561	6.7	1236	10.6

주) 산출식 : $\frac{\text{만 1-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간 손상사망자수}}{\text{해당년도 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8) 비의도적 손상사망

2010년 지역별 비의도적 손상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14세 어린이 4.7명이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세 어린이는 10만 명당 6.4명이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대전에서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1-14세 어린이는 10만 명당 5.1명이었으며, 1-19세 어린이는 10만 명당 5.8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별로 1-19세 10만 명당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8.8명(광주)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4.1명(인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 지역별 비의도적 손상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41	2.7	98	4.5
부산	19	3.6	36	4.7
대구	15	3.5	30	4.9
인천	15	3.2	27	4.1
광주	12	4.3	34	8.8
대전	16	5.1	22	5.8
울산	11	5.2	20	6.8
전국	393	4.7	752	6.4

주) 산출식 : $\frac{\text{만 1-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간 비의도적 손상사망건수}}{\text{해당년도 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9) 타살사망

지역별로 타살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0만 명당 0.5명 정도의 어린이가 타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1-19세 어린이 10만 명당 0.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에서는 2010년 타살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21 > 지역별 타살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8	0.5	10	0.5
부산	1	0.2	2	0.3
대구	0	0.0	0	0.0
인천	6	1.3	6	0.9
광주	2	0.7	2	0.5
대전	0	0.0	1	0.3
울산	0	0.0	0	0.0
전국	49	0.6	58	0.5

주) 산출식 : $\frac{\text{만 1-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간 타살사망건수}}{\text{해당년도 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10) 어린이학대

어린이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0.9명, 1019세 어린이 10만 명당 1.0명이 어린이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학대로 인한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광역시는 인천으로 10만 명당 1.3명으로 나타났으며, 1-19세 어린이의 경우 10만 명당 1.6명이 사망한 광주가 어린이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 지역별 어린이학대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15	1.0	20	0.9
부산	2	0.4	3	0.4
대구	1	0.2	2	0.3
인천	6	1.3	6	0.9
광주	2	0.7	6	1.6
대전	2	0.7	4	1.1
울산	1	0.5	1	0.3
전국	79	0.9	119	1.0

주) 산출식 : $\frac{\text{만 1-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간 아동학대 사망건수}}{\text{해당년도 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11)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2.2명, 1-19세 어린이 10만 명당 3.3명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2010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14세 어린이 10만 명당 1.5명, 1-19세 어린이 10만 명당 2.6명의 어린이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2010년 사망하였다.

<표 23 > 지역별 외상성 뇌손상 사망률(2010)

지역구분	어린이(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1-19세)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10만 명당)
서울	25	1.6	61	2.8
부산	2	0.4	12	1.6
대구	3	0.7	14	2.3
인천	6	1.3	17	2.6
광주	5	1.8	18	4.7
대전	4	1.5	9	2.6
울산	5	2.4	9	3.0
전국	186	2.2	385	3.3

주) 산출식 : $\frac{\text{만 1-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간 외상성 뇌손상 사망건수}}{\text{해당년도 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12) 안전사고

어린이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를 행정 구역 대비로 비교해보면 대전시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전체 지역의 안전사고 사망어린이의 2.9%에 해당하였다.

<표 24 > 지역별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2010)

행정구역	안전사고 사망자(명)	전체 안전사고 사망 어린이 중 비율(%)
서울	1,230	12.9
부산	530	5.6
대구	419	4.4
인천	429	4.5
광주	279	2.9
대전	280	2.9
울산	212	2.2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성범죄

최근 들어 가장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고 유형이다. 발생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0-12세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를 살펴보다라도 2008년에 21건, 2009년에 46건, 2010년에 48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25 > 연도 및 지역별 어린이(0-12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구분	2008			2009			2010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전국	45	901	946	88	948	1036	71	1051	1122
서울	10	138	148	5	120	125	9	122	131
부산	4	68	72	5	48	48	4	54	58
대구	2	44	46	6	57	57	3	41	44
인천	2	82	84	4	73	73	4	55	59
광주	6	22	28	4	44	44	6	43	49
대전	3	18	21	4	46	46	1	47	48
울산	0	13	13	4	36	36	3	20	23

출처 : 여성가족부

13-20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 건수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는 점점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에 61건, 2009년에 93건, 2010년에 128건 발생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의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 연도 및 지역별 청소년(13-20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구분	2008			2009			2010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전국	114	3,307	3,421	126	3,168	3,294	108	3,423	3,531
서울	16	762	778	35	692	727	21	687	708
부산	13	215	228	9	219	228	9	245	254
대구	0	96	96	8	122	130	5	126	131
인천	5	187	192	5	225	230	4	196	200
광주	1	99	100	4	116	120	5	125	130
대전	4	57	61	3	90	93	1	127	128
울산	1	54	55	2	96	98	1	78	79

출처 :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광역시 중에서 인천, 광주, 대전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전국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서 어린이의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8.56건에서 19.2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7 > 연도 및 지역별 어린이(0-12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구분	2008			2009			2010			3년평균 (08-10)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전국	1.14	25.01	12.51	2.3	27.02	15.12	1.92	30.89	15.81	14.11
서울	1.39	20.87	10.72	0.72	18.73	9.38	1.35	19.70	10.2	10.11
부산	1.62	31.91	15.43	2.14	20.43	10.8	1.81	26.87	13.74	13.35
대구	.99	24.86	12.11	3.1	29.83	15.64	1.63	25.01	12.63	13.46
인천	.92	40.93	20.09	1.89	35.21	17.92	1.96	28.97	14.97	17.71
광주	4.58	18.33	11.15	3.15	34.32	18.08	4.91	38.17	20.85	16.59
대전	2.33	15.42	8.56	3.21	36.74	19.25	0.83	42.40	20.78	16.08
울산	.0	14.75	6.86	4.13	35.22	18.68	3.22	24.24	13.1	12.80

출처 : 여성가족부

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63.7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 대구에서 가장 적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대전에서는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년에 인구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씩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3년 평균 10만 명당 54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했다.

<표 28 > 연도 및 지역별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구분	2008			2009			2010			3년평균 (08-10)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전국	4.1	133.1	64.95	4.45	125.7	61.51	3.74	133.9	64.82	63.76
서울	2.94	154.1	74.85	6.39	139.6	69.68	3.81	138.3	67.54	70.68
부산	6.25	118.7	59.61	4.34	122.1	58.92	4.33	137.7	65.85	61.68
대구	0.0	75.5	33.32	4.92	94.48	44.57	3.04	95.7	44.22	40.75
인천	3.14	127.2	62.68	3.06	149.8	93.34	2.4	128.4	62.62	66.22
광주	1.14	122.0	59.13	4.42	139.8	69.16	5.35	146.3	72.69	67.12
대전	4.41	71.3	35.73	3.24	110.4	53.41	1.06	153.6	72.14	54.00
울산	1.38	89.64	41.38	2.67	155.9	71.85	1.3	123.3	56.31	56.64

출처 : 여성가족부

14) 학교 안전사고

학교 안전사고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12,740건, 중학교에서 10,232건, 고등학교에서는 8,308건, 유치원과 기타 각 2,387건, 167건 발생하였다. 어린이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가 폭은 단순 수치 비교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 전국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2011)

(단위 :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기타	계
2009	8,475	6,955	5,667	1,516	109	22,722
2010	11,886	8,822	7,104	2,011	132	29,955
2011	12,740	10,232	8,308	2,387	167	33,834
계	33,101	26,009	21,07	5,914	405	86,51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15) 실종 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실종아동을 살펴보면 전체 실종아동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 전체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7,064건, 2009년에 8,602건, 2010년에 9,47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전국 실종아동 발생 건수(14세 미만 정상아동)

구분		2008	2009	2010
성별	남	4,456	5,052	4,977
	여	2,608	3,550	4,493
계		7,064	8,602	9,470

출처 : 여성가족부

제2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조례 검토

1)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규는 해당부처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법규의 해당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0년 5월 25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4차 개정 이루어지게 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적인 식품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10년 5월에 개정되었으며 특정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중략>...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략>...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중략>...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 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중략>...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08년 12월 일부 개정되었으며 놀이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어린이놀이기구” 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지칭한다.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명시 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중략>...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중략>...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중략>...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제 11조에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중략>...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2011년 1월 21일 제정되어 같은 달 24일 시행된 규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및 지정 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중략>...④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중략>...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중략>...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중략>...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중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중략>...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중략>...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의 마련을 위해 체계화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신고·응급조치 및 지원, 선도·보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0.4.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후략)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4월 7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중략)...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4월 12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항과 비밀보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중략)...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2)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 검토

(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5년 대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전광역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재난 정보에 관한 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략>...대전광역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임무)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의 현황파악과 유지 및 보고 2. 기상특보 및 재난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 상황의 상급기관 보고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단체 등에 전파 4. 자치구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6. 자치구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7.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09년 10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어린이안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사고에 대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중략>...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어린이안전 교육·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3)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상기와 같이 어린이 안전관리 법률 및 대전광역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합의 및 시사점을 발견했다.

우선 전체적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임의조항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린이의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져 안전에 위협을 받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영양표시도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의 경우 강제규정화 되어 있음은 일견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 법 조항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3조 시설장과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관련교육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1) 중앙정부 관련 정책

(1) 아동안전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씨랜드 참사,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학교급식과 동, 어린이집 굴굴이죽 사건, 통학버스 사고, 낚은 놀이기구에 의한 아동사망사건 등 화재, 불량식품, 추락, 익사, 교통사고와 같은 다양한 사고들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안전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 함께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아동복지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주도로 2000년까지 아동의 안전사고를 당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아동안전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책 시안에는 구체적인 법과 행정체제를 갖추지는 못한 형편이었다.

이후 2000년에는 자구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등을 겪고서야 국무조정실에서 ‘자구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였고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건강 및 안전조항’이 신설되면서 아동안전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아동안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에 [어린이 안전원년]선포되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교통안전, 추락사고, 익사, 중독 대책 등 12대 분야 7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년 이후 5년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매년 10% 감소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6년에는 76개 과제에서 완료된 18개 과제를 정리하고 12대 분야 58개 과제로 정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현재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2006년 이후 5개년 동안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 감축 목표로 추진전

락을 마련하고 12대 분야 76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주로 역점을 둔 사항은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합리화하고, 아동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동네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개선 실시, 아동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2010년까지 19개 과제를 완료하고 57개과제는 계속 추진 중이나 2010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기존 12개 분야의 복잡한 영역을 축소하여 대과제를 별도로 설정하고, 세부추진과제와 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추진과제 대영역을 4개로 축소하고 세부추진과제 또한 종합화하여 주관기관을 지정, 세부사업 또한 46개 사업으로 축소한 바 있다.

<표 31> 제 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

추진 과제	세부추진과제	세부사업	주관기관
1. 어린이 안전 기반 구축	1-1. 아동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1.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2.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 3. 안전 설비 설치 및 점검	총리실, 복지부 통계청
	1-2. 아동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4.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5. 안전관리대상 아동용품 확대 및 안전기준 강화	총리실, 복지부, 지경부, 환경부
	1-3.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6. 지역내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아동제품 안전기술 지원 8.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홍보 확대	행안부, 지자체
2.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보장	2-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9. 가정사고 예방사업 확대 10.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11.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	복지부, 국해부, 방재청
	2-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2. 효율적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시 13. 어린이보호 차량 관련 기준 및 제도 개선 14. 교통단속 및 홍보 강화 15. 어린이보호 차량 관련 기준 및 제도 개선 16. 교통안전교육 기반 마련 17. 아동안전모 및 카시트 착용률 확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2-3. 안전한 교육 및 보육환경 조성	18.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19.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 20. 안전사고 보상체계 현실화	교과부, 복지부

	2-4.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	21.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안전성 강화 22.놀이용품 안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23.익사예방 체계 정비 및 활성화 24.유해물질 관리 강화	지경부, 소방청
	2-5. 안전한 급식 및 식품 제공	25.학교급식 개선 26.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 강화 27.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강화	교과부, 식약청
3. 위 협 으 로 부 터 의 보 호 및 안 심 환 경 조 성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28.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지속 전개 29.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강화 30.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교과부, 복지부
	3-2. 아동학대 제도개선 및 예방	31.피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2.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33.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34.피학대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3-3.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35.실종예방홍보활동 강화 36.실종아동 찾기 시스템 구축 및 조기 가정복귀 지원 37.실종사건 수사 활동 강화	복지부, 경찰청
	3-4. 유해환경에서의 어린이보호체계 강화	38.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 및 단속 강화 39.학교 및 주거지 주변 유해업소 확산 방지 40.컴퓨터 중독 예방 및 체계 관리 41.아동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교과부, 복지부, 국해부, 지경부
4. 손 상 피 해 아 동 지 원 체 계 구 축	4-1.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42.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43.안전교육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활성화	복지부, 소방청
	4-2. 손상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지원	44.아동전용 손상병원 지정·운영 45.저소득층 및 중대형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 46.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복지부, 교과부

〈표 32〉 정부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사업수(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어린이안전 기반구축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8	19	14	5

(2) 정부 아동안전정책 추진과정 평가와 개선 방향

이상과 같이 최근 들어 정부의 아동안전정책 추진시 본격적인 아동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안전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으며, 특히 안전관련 법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기존 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의 조항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비 착용과 어린이 안전벨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 조치가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 안전관련 법, 제도의 통합화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를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평가하고, 가장 높은 사고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아동안전 관련법을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에 강제조항 및 통합적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관계 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아동안전은 여러 부처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아동안전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행정조직 대부분이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각 부문별로 안전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가 분화되어 있는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역기능 또한 심각하게 부각되어 왔다. 특히 관리 및 책임소재의 실종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대책은 부처별로 추진하면서 각 과제별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도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전달체계에 있어 아동안전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과 중복과 혼선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아동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라인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안전정책 수립·추진 부처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동대상 안전사업 확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아동안전정책 추진실태 평가 강화 및 어린이 안전 모범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동대상 안전사업을 전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동안전사업을 아동의 권리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여 아동사고에 대한 문제를 아동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아동정책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아동안전문제는 결국 개인이나 가족단위에서 닥치거나 해결해야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향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 사고 감소를 위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일

반 시민에게 아동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지속적인 아동안전 공익광고와 캠페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아동안전 주간을 선포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마인드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참여형 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아동, 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일반시민, 교육기관 종사자 즉,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현 어린이안전관련 사업이나 정부 시책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고사망 외에 사고와 관련된 상해를 입는 아동의 수와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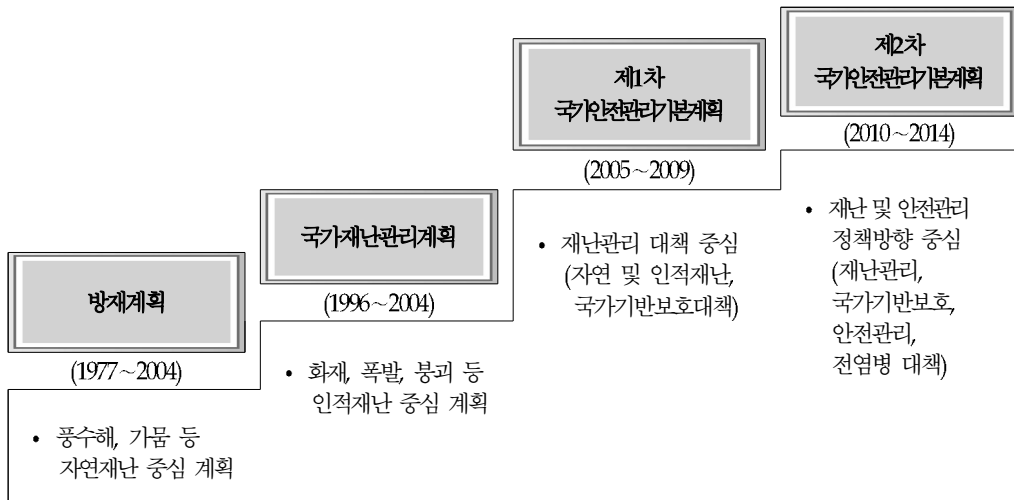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안전사고 사례 수집을 위한 손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례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즉,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교육기관에서 바로 사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사고후 비합리적인 처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시설 관리자, 각 담당 공무원, 아동교통관련 담당자 등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아동교육이수자격증 발급,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가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2) 대전시 정책 및 추진 사업

(1) 안전한 대전 만들기 2010 추진계획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대전광역시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1977년부터 「방재계획」을, 1996년부터는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중앙부처의 기본 계획과 집행계획, 시 및 구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그림 10> 지역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변천

2010년 이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지역안전관리계획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0년까지는 별도의 어린이안전관리계획이 없었으며, 동 계획은 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에 하나의 사업영역으로써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기획·추진되

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2009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대전시 어린이안전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조례안으로 인하여 그동안 전체 대전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어린이안전관리계획이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사고를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지칭하고 포괄적으로 사고에 대비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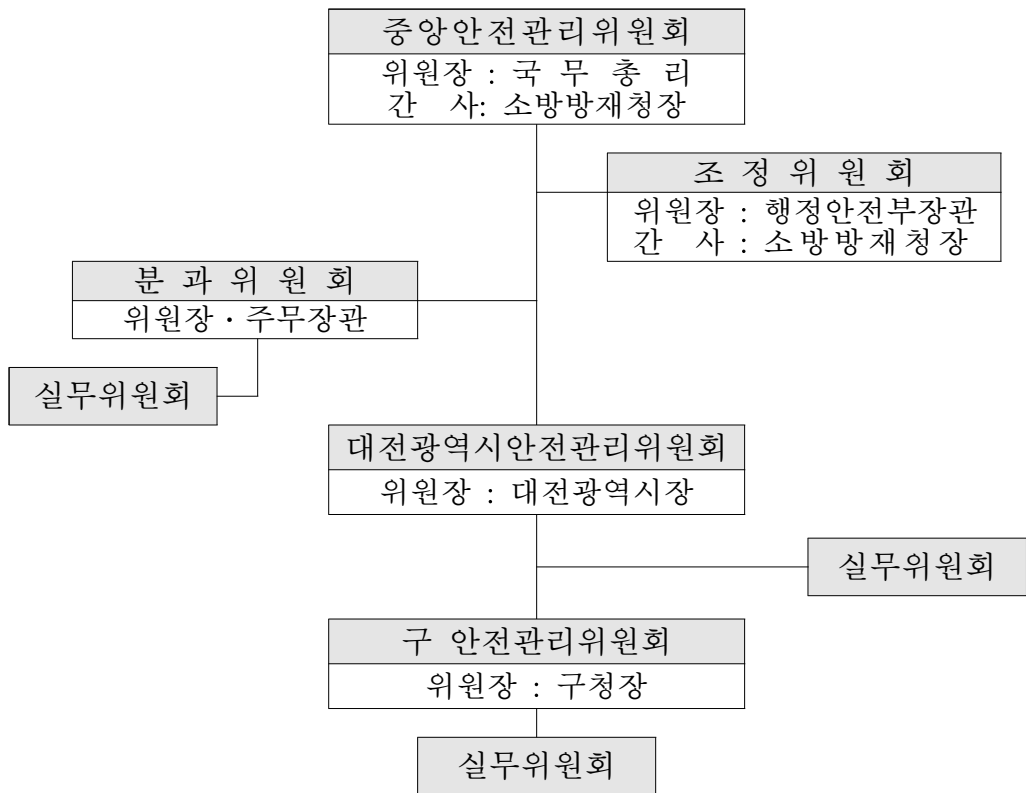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중략>...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어린이안전 교육·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대전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고 대전시의 안전관리 시책의 협의·조정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각 개별 자치구청장과 각 부문별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고, 위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림 11> 안전관리 위원회 추진체계

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대전광역시는 안전도시사업(SAFE 대전 2010)을 추진하면서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과가 안전사업을 총괄·조정 및 대내외 홍보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관리 또한 본 추진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2〉 안전관리사업 추진체계

그동안 이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아동안전까지 관할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대상별 안전관리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2010년 말에 이르러 대전시 어린이안전관리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3) 추진과제 및 사업 내용

안전분야	안전유형	추진과제	투자금액 (백만원)
1. 재 난 안 전	• 풍수해, 하천, 산림재해	6개 과제	18,482
2. 교 통 안 전	• 교통사고, 자전거	15개 과제	56,818
3. 소 방 안 전	• 화재, 구조구급, 산불	8개 과제	13,070
4. 환 경 안 전	• 대기, 수질, 폐기물, 방사능	13개 과제	33,324
5. 시 설 안 전	• 도로,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재	14개 과제	10,808
6. 위 생 안 전	• 전염병, 식중독, 농축산물	5개 과제	5,529
7. 가 정 안 전	•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6개 과제	5,764
8. 범 죄 안 전	• 학교폭력, 강력범죄	13개 과제	1,535
9. 일 반 안 전	• 안전일반, 안전문화	20개 과제	43,493

대전시는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하에 2010년에는 9대 안전분야 27개 안전유형별 100개과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188,82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표 33 > 안전한 대전만들기 2010 중점추진과제 및 재정투자액

안전분야	안전유형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 (백만원)	추진부서
① 재난 안전	1. 풍수해	1. 기상관측시설 고도화	50	재난관리과
		2. 풍수해보험 확대운영	7	"
	2. 하천	1. 수해 상습지 개선	12,753	생태하천과
		2. 하천정비 사업	411	"
		3. 하도 준설	4,500	"
	3. 산림재해	1. 사방사업	761	푸른도시과 외1
② 교통 안전	1. 일반교통	1.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	603	교통정책과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500	"
		3.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관리	2,715	"
		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94	"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018	"
		6.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5,270	"
		7. 위험도로 구조 개선	5,510	"
		8. 교통신호시설 최적화	2,074	"
		9. 도시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3,937	"
		10. 노인보호구역 정비	201	"
	2. 자전거	1.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구축	23,865	건설도로과
		2.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500	"
		3. 시민공용자전거 보험가입	675	"
		4. 자전거 안전교육	216	"
		5. 자전거 등록제 및 안전의무 강화	40	"
③ 소방 안전	1. 화재	1.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1,957	소방본부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1,072	"
		3.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 설치	4,134	"
	2. 구조구급	1. 구조·구급장비 현대화	1,649	"
		2.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2,104	보건정책과
		3. U-안심콜 서비스	-	소방본부
	3. 산불	1.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170	푸른도시과
		2. 임도 시설 설치	1,984	"

안전 분야	안전유형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 (백만원)	추진부서
④ 환경 안전	1. 대기	1. 대기오염 측정망 정비	288	환경정책과
		2.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6,023	"
		3. 저녹스버너 보급	1,705	"
		4. 자동악취측정시스템 구축운영	32	"
		5. 탄소포인트제 운영	86	"
	2. 수질	1.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	95	맑은물정책과
		2. 악취방지 사업 추진	1,292	"
		3.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	1,478	"
		4.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세척	12,100	"
	3. 폐기물	1.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0,110	자원순환과
		2. 청결 홍보도우미 운영	75	"
	4. 방사능	1. 원자력주변지역 방사능측정 용역	40	자치행정과
2. 원자력 안전시민협의회 구성운영		-	"	
수 시설 안전	1. 도로 건축물	1.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검사	1,964	건설도로과
		2. 가로등 정비	500	"
		3. 공동구 관리	1,140	"
		4. 도로시설물 정비	1,006	"
		5. 지하보도 정비	300	"
		6. 도로포장 정비	1,007	"
		7. 특정관리시설 보수보강	1,466	재난관리과
		8. 도로기능 유지관리	1,522	건설관리본부
		9. 부실시공 예방 품질관리	140	"
	2. 놀이시설	1.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현대화	1,400	재난관리과
		2. 어린이놀이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
	3. 복지시설	1.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100	복지정책과
	4. 문화재	1. 문화재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205	종무문화재과
		2.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58	"
	⑥ 위생 안전	1. 전염병	1. 전염병 대책 관리	5,100
2. 식중독		1.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단 운영	30	식품안전과
		1. 안전한 축산물 공급	125	농업유통과
3. 농수축 산물		2. 쇠고기 이력 추적제	40	"
		3. 유기동물 관리	234	"

안전 분야	안전유형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 (백만원)	추진부서
⑦ 가정 안전	1. 여성	1. 가정, 성폭력, 성매매 방지사업	2,391	여성가족청소년과
	2. 청소년	1. 위기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180	"
	3. 노인	1. 노인돌보미 바우처 2.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348 795	" "
	4. 장애인	1. 청각장애인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2.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안정기 설치	25 25	" "
⑧ 범죄 안전	1. 학교폭력	1. 배움터 지킴이 배치	683	대전교육청
		2. 학교내 CCTV 설치	230	"
		3.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	"
		4. WEE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281	"
		5. 학교폭력긴급전화 및 상담센터 운영	1	"
		6.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	"
		7. 피해학생보호ONE-STOP지원센터 운영	70	"
		8.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사업	90	"
	2. 강력범죄	1. 치안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행정과
		2. 특별사법 경찰조직 운영	-	"
⑨ 일반 안전	1. 일반안전	3. 브랜드 안심택시 운영	-	운송주차과
		4. 아동안전 지킴이집 및 지킴이 운영	180	대전경찰청
		5. 안심귀가 시내버스 운영	-	대중교통과
		1. 재난 전조정보 관리체계 구축	-	재난관리과
		2. 재난대응 종합 훈련	25	"
		3. 재난경보시스템 확충	485	"
		4. 보행자 안전	3,870	"
		5. 등산사고 안전	70	소방본부
		6. 초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	13	"
	7. 사이버 안전	756	정보화담당관	
	2. 안전문화	8. 도안지구 U-Safe City 건설	38,000	"
9. 재난·사고 긴급전화 110 일원화		-	소방본부	
1. Safe Daejeon 체험한마당 개최		150	재난관리과	
2.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57	"	
3.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10	"	
4. 안전모니터 및 방재단 운영		-	"	
5. 안전점검의 날 운영		-	"	
6. 시민 무료 안전건설팅제 운영		-	"	
7. 도레미 교통안전문화 시민모임		-	교통정책과	
8.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16	소방본부	
9. 소외계층 자동확산소화용구 보급	30	"		
10. 1차량 1주택 1소화기 갖기운동	-	"		
11.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1	"		

이 가운데 2010년 사업추진 시 어린이 안전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재난, 소방, 환경안전 분야를 제외한 시설안전 등 6대 안전분야 10개 안전유형에 24개 과제에 11,168백만원 투입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 안전한 대전만들기 2010 중 어린이안전관련 중점추진과제 및 재정투자계획

안전 분야	안전유형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 (백만원)	추진부서
교통 안전	일반교통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500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94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018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5,270	"
	자전거	자전거 안전교육	216	"
시설 안전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현대화	1,400	재난관리과
		어린이놀이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
	복지시설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100	복지정책과
위생 안전	식중독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단 운영	30	식품안전과
가정 안전	여성	가정, 성폭력, 성매매 방지사업	2,391	여성가족청소년과
범죄 안전	학교폭력	배움터 지킴이 배치	683	대전교육청
		학교내 CCTV 설치	230	"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	"
		WEE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281	"
		학교폭력긴급전화 및 상담센터 운영	1	"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	"
		피해학생보호ONE-STOP지원센터 운영	70	"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사업	90	"	
	강력범죄	아동안전 지킴이집 및 지킴이 운영	180	대전경찰청
안심귀가 시내버스 운영		-	대중교통과	
일반 안전	일반안전	보행자 안전	3,870	"
		사이버 안전	756	정보화담당관
	안전문화	Safe Daejeon 체험한마당 개최	150	재난관리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1	"

(4) 대전의 어린이 안전 중점 추진 대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대전시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안전사업 분야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9대 분야 25개 안전유형별 1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행안부 주관,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어린이 안전관리 또한 학교교육에서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통한 안전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 대책의 미비점 개선과 교통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겠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안전생활화 실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확산에 기여한 점이 눈에 띄는 교통분야의 성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성과로는 각종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실시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였고, 공연장에 대한 일제안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관리책임자 사전교육, 노후 공연장 보수로 공연장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연중 기동감시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과 다양한 위생안전 예방사업 시행으로 어린이 식중독 및 전염병 발병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추진으로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손 씻는 시설비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학대, 폭력, 비행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과 관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및 가정 환경 조성에 성과를 가져온 점이다. 보육시설 안전평가 인증제 실시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 CCTV 설치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기반을 구축하였고,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을 시민 삶의 중심가치로 정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시민참여형 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의식과 실천활동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활성화 및 개선사항 등이 냉철하게 지적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해본 내용이다.

첫째, (가칭)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사업을 기획하여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현, 관련 사업이 다양하되,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몰입형의 프로젝트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홍보 및 어린이 안전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최종 목표를 제로 상태로 가도록 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4E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즉 교육<Education>·시설<Engineering>·단속<Enforcement>·평가<Evaluation>의 논리적 연계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각각의 기관들이 안전사고제로화 프로젝트에 상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적인 과제이며, 대전시의 민·관·언론·기업 등이 적극 나서 어린이 안전사고 Zero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사후관리형 방식에서 예방형 체계로

전향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자각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교육 인증서를 전달하고, 초등학교 입학시 학교에 제출토록 권장하는 방안이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 유괴 예방 캠페인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어린이 중심, 사람 중심의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학교주변 어린이의 보폭에 맞는 보행자 녹색 신호주기 조성 등 어린이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나부터 교통질서 지키는 문화정착, 『교통사고 50% 줄이기』 연차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이 함께하여 달성하는 캠페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위한 시민참여형 안전지도만들기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강화와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복구와 보상위주에서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정책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시민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여 생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노력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는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의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점검과 안전관리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어린이 먹거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3) 타시도 추진 사례

(1) 한국형 어린이안전도시 시범사업-과천시

과천시는 한국형 어린이 안전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과천 만들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TF팀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과천을 만들기 위한 기본전략수립 및 지속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연차별 단위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선언하고 이후 생활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육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장·의회의장·경찰서장·소방서장·초등학교장 등 민·관·기업·언론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한국형 어린이 안전 성공모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의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참여 방안과 인프라 구축, 안전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인 코오롱 건설과 함께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정기안전실태점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범죄에 대비해서는 방법용 CCTV를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고, 현재 총 104대의 방법용 CCTV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방법용 차량번호판독 CCTV 10대를 시 진·출입 구간에 설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과천시의 방법용 CCTV 설치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설치이후 범죄율도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송파구

서울시 송파구는 긴밀한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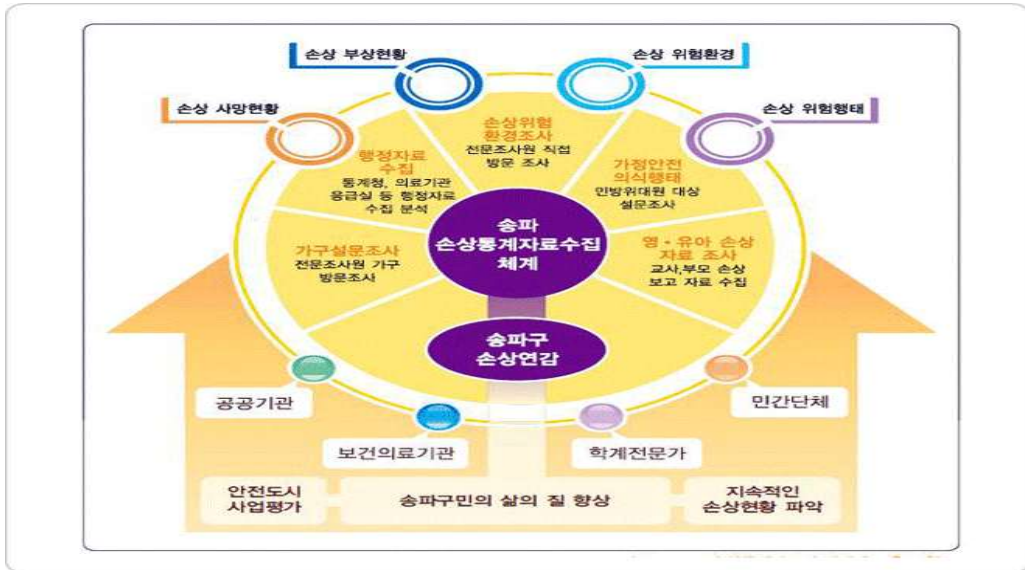
<그림 13> 송파구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네트워크 체계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안전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프티 닥터제, 송파 다동이 안심보험, 송파 안전 보안관 협약 등을 맺고 있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어린이 안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14> 송파구의 안전도시 추진체계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송파구가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손상 발생 현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여 손상 지표를 생산하고, 손상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수행,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5〉 송파구 어린이 손상감시 체계

이외에도 송파구에서는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교육관을 운영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안전 체험교실, 어린이 안전 동화책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둥이 안심보험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실, 초등학교 안전교실, 청소년 안전교실 등 연령대별로 적절한 안전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노력 뿐만아니라 어린이 안전교육, 보육교사 안전교육, 부모 안전교육, 생활안전 경연대회를 통해 안전한 보육시설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제3절 국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1. 일본의 소학교 안전교육

일본의 안전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르는 생명존중 교육으로 학교보건법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독립된 안전교과는 없지만 교육과정 중 안전교육을 소학교에서는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 중 ‘교통안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크게 교통안전과 재해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학교에서 매년 최소 20시간을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보건 교과서는 주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보건교육 내용이 반복해서 구성되어 있다.

안전지도는 특정한 교과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범교과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행사와 학급활동, 특별활동에서의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행사는 ‘안전보건 체육행사’를 통해서, 학습활동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되고 있다. 이들 특별활동에서의 지도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능력의 육성, 습관의 형성을 직접적 목표로 하여 지도 시간을 설정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전지도를 실행하기도 한다. 문부성에서는 대지진 경험을 통해 학교의 방재체제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안전교육을 원활하게 지도하기 위해 「소학교 안전지도 지침」을 개관하여 학교에서 수행하는 안전지도의 목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학교의 안전교육은 건강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조화적인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는 소학교의 교육 목표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이해함과 동시에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태도와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생활, 이과,

도화, 공작, 가정 등의 교과서에서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급 학교 안전교육 지침서에는 안전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어서 학교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목이나 특별활동의 경우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안전 지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에서는 1972년 3월에 초등학교에서 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안전지도 입문서」를 만들었고, 1983년 5월에 개정찬을 처내었다. 이 책은 초등학교 안전지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 목표, 내용, 진행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지도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일본은 각 급 학교별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학급 보조자료 개발 및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안전관리 조직에는 각 급 학교의 ‘학교안전회’가 있으며, 안전관리 시행은 각 학교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교장, 교감, 안전교육주임, 보건주사, 양호교사, 학년주임, 학급다임, 생활지도주임, 교과담임으로 이루어진다.

안전교육은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에 자리 매김 되어 있지만, 한편 등·하교, 수업시작 전과 방과 후, 휴식시간, 청소, 급식 등 소위 교육과정 밖이라고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도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안전지도를 강조한다(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비교 中.)

2. 국외 어린이놀이시설 규정

1) ISO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통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환경경영에 관한 기준이다.

ISO9001/ISO14001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체질에 맞는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사 품질/환경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급자 품질/환경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제조분야)
- ISO14001 :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9001 & 14001 : 품질&환경 통합시스템에 대한 인증

국내·외 어린이놀이시설 제조업체들도 자사 품질/환경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기 위하여 ISO를 취득하고 있다.

2) 유럽연합(EU)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제품안전에 대한 기본법 성격인 일반제품안전 지침(GPSD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에 의하여 유럽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CE마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제조자는 제품 및 설치단계에서 영국의 BSI, 독일의 TÜV 등 제3자 안전인증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

한 유럽표준(EN1176, EN1177)에 적합하다는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유럽표준에 미달되는 제품단계 또는 설치단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과산할 정도로 배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어린이놀이기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영국은 정부가 놀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놀이터 안전의 비결은 효과적인 정밀검사제도를 꼽을 수 있다. 놀이터의 사용 수준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등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현지 안전감독을 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공학적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공학적 조사는 정부당국과 놀이시설물 제조업체와 관계가 없는 독립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한다.

독일 TÜDV의 인증 절차는 모두 6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적용지침과 규격의 확인을 실시하고 규격은 EN1176-1,2,3...11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단계는 필수요구사항과 조화, 규격에 의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되며 적합성 평가의 내용은 지침과 규격에 의한 평가(시험&TCF검토)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다. 3단계는 기술 문서의 작성으로(TCF)하며 기술문서 구성은 적합성 선언서, 도면(기구), 안전관련 계산식, 부품 리스트, 메뉴얼(안전지침, 설치, 사용, 유지 보수), 제품관련 사진이 있다. 4단계는 공장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과정이다. 공장심사시 TÜ#V GS Mark나 TUV.COM Mark 부착시에는 연 1회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CE Mark인 경우에는 공장심사가 제외된다. 5단계는 적합성 선언서 작성이며 적합성 선언서 내용은 적용지침, 적용규격, 제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자 주소, 필요시 EU 대리인, 필요시 3자 기관명, 제조자의 서명날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안전을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에 마크를 부착한다.

3) 미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

미국에서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자는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제놀이기구제조자협회(IPEMA: International Playground Equipment Manufactures Association)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동 협회의 안전인증을 획득하여야 가능하다.

안전인증 시에는 미국시험재료협회의 표준(ASTM F1487, F1918, F1292)이 안전기준으로 적용되며 시험은 디트로이트 시험 연구소(DTL : Detroit Testing Laboratory) 등 4개 시험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1981년부터 일반인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놀이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하고 사업자 및 관리주체에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우리나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귀감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전에서 놀이터 안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아동을 2세에서 12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놀이터에 대한 정의와 놀이터 시설에 대한 정의, 관리자, 놀이터 안전검사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놀이터를 운영하는 자의 필요조건까지 명시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반드시 놀이터 안전검사를 안전검사자에 의해 받아야 하며, 이 검사에 근거하여 놀이터개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놀이터에 대한 설계는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의 놀이터안전 핸드북의 조항과 ASTM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규정에 이 규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4) 일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

유럽과 미국에 비하여 다소 늦었지만 일본에서는 2003년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이 도시공원 안전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본 공원시

설협회(Japan Park Facilities Association)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에 관한 기준안으로 독일 DIN7926, 유럽 EN1176, 미국 ASTM-F1487, CPSC를 연구하여 일본의 어린이에게 맞는 JPEA-S2002(일본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원관리자에게 배려된 기술된 사항과 놀이기구 제조자, 시공자, 보호자 등을 위해 관련 지침서가 만들어졌으며, JPFA-S2002 지침서의 성격은 도시공원에 설치하게 되는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도 JPFA-S2002 지침서를 주지하고, 학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도 비치하여 놀이터 안전지침으로서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Playground Safety Network (PSN)은 제조업 대표, 컨설턴트, 조정가, 조사관, 교수 및 학생, 그리고 부모들을 멤버로 구성하고 있으며, 최우선의 역할은 놀이시설 안전교육 서비스이다. 아울러 PSN은 1997년 놀이시설 안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연구 중)

3. 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

1) 미국

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미국 교통안전시설 편람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개념을 확대하여 고등학교의 주변까지 스쿨존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편람에 의거 최적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학생들을 유도하는 등의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신호나 표지판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Adult Guards 와 S형 돌 Patrols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부모나 고학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의 교통질서 지도를 통해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도로와는 다른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벌칙이나 추가 범칙금이 주어진다. 여러 제도와 시설투자 및 운전자들의 의식향상으로 인해 미국은 2003년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5명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교통량과 속도를 제어하고 규제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 주변의 도로 및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정온화 기법에 의거 학교 외곽부의 속도는 48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의 도로는 32kmh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하여 속도 혹, 보행섬 등을 도로 통로의 입구와 마감 부분에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차로 수를 축소시켜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싱글 트랙 로드, 횡단보도 양방향 가장자리 구역선의 약 15m를 지그재그 그어 자연스런 속도 감속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지브라 횡단보도와 보행자 우선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위험한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를 감소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로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197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한 community zone 사업의 일부로 소학교,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하여 속도제한 및 통행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학로 표지판 설치 등 각종 안전표지 정비와 스쿨존 입구의 노면표시와 차량통행금지 시간 등을 표시하는 등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등학교 시간 위주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속도는 최고 20kmh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보차 공존도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통규제나 시설개선을 통해 보행자나 학생, 자전거 등의 안전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적용되고 있다(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中).

4. 각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1) 영국

교통진정대책(a load safety good practice guide)에서 관련 내용 규정, 학교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주택지를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도로 및 교통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미국

school route :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한다는 점에 있어 일정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학교를 주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에 의해 계획되며 법을 바탕으로 통행을 규제한다.

미국 교통안전시설 편람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교통규제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각국의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연구 中)

5. 어린이 놀이터 관련 국제안전 규정

미국의 ASTM-F1487, ASTM-F1292, ASTM-F1951,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 영국 (BS 5696-S: 1986), 독일연방 (DIN7926)을 포함하는 유럽연방의

N1176~7, API-1984 (Association of play Industry) 캐나다 CAN/CSA- Z614-03, 호주 뉴질랜드 규정 AS/NZS 4486.1:1997, 등이 있고 유럽과 미국 표준을 을 참고하여 일본 안전지침서로 사용하는 일본 JPFA-S2002등이 있다.

모든 놀이터 안전규정이 추구하는 바는 공공 놀이터 시설물 상용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관련 운영자들에게 알려줌으로서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설계, 배치, 유지 보수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자국의 공공 놀이터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필수적 안전 관리 지침서이며 표준규격 이다.

캐나다 에서는 모든 놀이터 제조업자들이 자신이 제작한 놀이터 구조물에 대하여 CAN/CSA- Z614-03을 근거로 안전 테스터를 스스로 하여 문제가 없음을 공포하고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차후 설치 시공된 놀이터에 대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조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한국 어린이 놀이터 위험 실태 조사와 국제 안전규정 시스템을 통한 비교분석 中).

6. 외국의 소방교육

1) 영국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포함시켰으며, 안전관리조직 운영시 행정기관은 학교보건 교육원으로서 초중등학교 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며 주기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1990년대 안전교육 지침서와 학급용 교재를 펴냈다.

전국조직으로 교통안전클럽을 만들어 3~8세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익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내용을 개편한다. 영국의 안전 교육은 왕립사고방지협회와 지방교육국, 교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가정, 학교, 기타 학생 생활 전역에 걸친 제반 사고의 방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실행된다. 교육과학성은 안전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지도서, 참고서, 교재, 연습장류를 발행 배포 하고 있으며, 학교의 안전관리는 지방 교육국의 책임 아래 학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 인원, 기타 배치가 연구되며,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5~7세, 7~11세, 11~14세, 14~16세로 구분하여 Key stage1~4 까지 운영하고 있다. key stage2는 지역 센터에서의 교육시 활용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한다. 내용은 화재안전, 도로안전, 응급처치, 신변안전, 전기안전, 철도안전, 가정안전, 약물안전, 물안전, 범죄, 공사장안전, 해변안전, 가스안전, 괴롭힘, 공원 및 놀이터 안전 등 다양하며, 상호작용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교육방식을 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위험상황을 직접 경험하여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위주의 안전교재이다.

2) 미국

많은 주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주마다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며, 자격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소방서, 경찰서, 적십자사, 강간 및 약물남용방지센터, 보건소, 의료센터에서 후원을 받는다. 여러 주에서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 사회와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각종 조직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주변이나 교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시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전화를 이용하도록 요청한다. 부모순찰대(POP)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 안전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며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다.

3) risk watch

미취학 아동부터 8학년을 대상으로 2개 학년씩 묶어 교육한다. 단계별로 역할극에 참여시켜 안전에 대한 창의력과 흥미를 북돋아 준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발급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예비평가와 평가내용이 수록되어 교육의 전략적 접근성이 탁월하다.

4) 일본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교육을 특히 강조한다. 각 급 학교별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학급 보조자료 개발 및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일본에서의 안전관리 조직에는 각 급 학교의 ‘학교 안전회’가 있으며, 안전관리 시행은 각 학교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방재관은 동경의 혼쵸 등 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150개소가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각종 재해에 관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박물관을 통해 여러 물품을 전시하여 화재의 무서움과 방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며 화재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中)

7. 국외사례검토 결과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 본 해외 사례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관련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아동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부터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각종 통계를 보완하여 아동안전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응급실 손상감시정보를 보완한 아동안전통계 체계를 확립하여 둔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아동안전관련 연구시 체계화된 자료를 얻기 곤란한 형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구의 사례는 우선, 무엇이 기반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정책지원은 사후 처방식의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 내 안전 및 레저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교육이나, 취학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체화하는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를 통하여 확일 할 수 있었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철저한 분석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율 감소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전광역시도 대전의 어린이들이 레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예방적 방향으로 정책의 전략을 수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가운데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예를 들
어 자전거, 스키장 등의 헬멧, 물놀이의 경우 구명조끼 의무화 또는 권고 등 예방
행위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부문에서 지속적인 관리·단속·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스쿨존의
설정, 단속 및 교육홍보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주행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 카시트 등 의무화가 이루어져 생활에 체화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관련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아동에 대해서
는 보다 집중적, 체계적 사업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또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사후에 발견·보호하는 체계에서 예방하는 체계로 전
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방임과 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사업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
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정신지체아 등 실종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
해서는 팔찌착용 등 집중적 예방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다섯 번째 국외사례 검토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동안전에 대
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
다. 특히, 이러한 정보나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지자체 차원에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우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절실하며, 기본적인 구비조

건임이 분명하다. (가칭)아동안전정보센터 등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의 사례처럼, 안전관련 통계의 분석 및 자료제공,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 정보 제공,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 정보제공,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교통 안전 등 아동안전의 대부분은 특정 정부기관 단독 업무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서 집중적 투자가 요구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련 홍보는 흥미롭고, 최신의 경향으로 구성하여 생활에 가까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어린이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제3절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제4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연구과제인 대전시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대전 시민의 어린이 안전관리 의식 및 태도, 정책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대전시민의 어린이 안전 의식과 태도, 각종의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2. 조사설계

표집방법은 비례층화표집을 채택하였다. 대전시 5개 자치구별로 층화한 후 성별/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하고, 400개 가구단위 표집 후 가구내 1인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10일간 대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형 400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조사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후,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본 문항 28개(하위문항 포함 65개)와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배경 문항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크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 유무, 안전에 대한 인식도,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대책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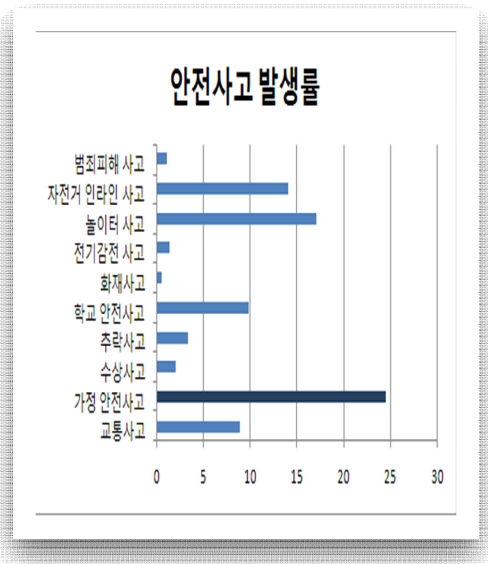
<표 35> 설문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자녀 안전사고 경험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 가정내 안전사고 - 수상사고 - 추락사고 - 안전사고 발생 이후 조치 사항 - 학교내 안전사고 - 화재사고 - 전기감전사고 - 놀이터 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불안 요인 - 불안 사고 유형 -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
안전사고 예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심폐 소생술법 인지 여부 - 자기 안전의식에 대한 인지도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대책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역점 사항 -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용도 -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인식도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 인식도 - 대전광역시 역점사항에 대한 태도 - 대전광역시 역점 추진 분야에 대한 태도 - 어린이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순위 - 손상피해 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순위

제2절 어린이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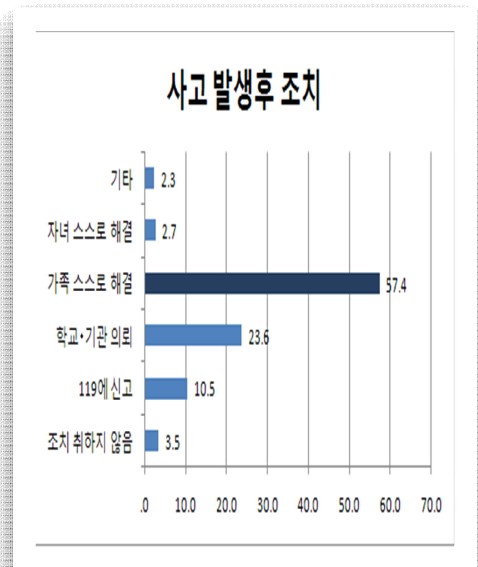
1. 안전사고 경험

대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400명의 응답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가정안전사고, 놀이터사고, 자전거·인라인 사고 순으로 안전사고 경험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00명 중 98명(24.5%)이 자녀가 지난 3년간 가정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놀이터 안전사고, 자전거·인라인 안전사고는 각 400명 중 68명(17%), 400명 중 56명(14%)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그림 17>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사고가 39건(9.8%), 교통사고가 35건(8.8%) 발생하였으며, 추락사고, 수상사고, 전기감전사고, 범죄피해사고, 화재사고도 각각 위 도표의 수치만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사고 발생후 조치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후 취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가족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응답자 258명 중 148명(5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관련기관에 의뢰 조치한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식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58명 중 학교·관련기관에 의뢰했다고 응답한 수는 61명으로 23.6% 차지했고, 119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수는 27명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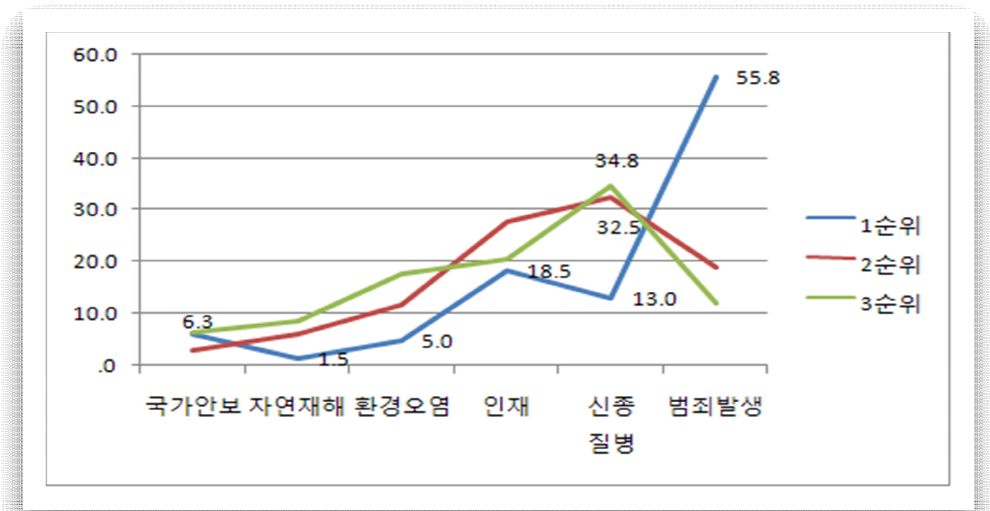
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자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경우는 각 258명 중 9명(3.5%), 258명 중 7명(2.7%)으로 나타났다. 258명의 응답자 중 6명이 기타로 응답하였으며, 기타로 응답한 6명 모두 병원 혹은 병원치료로 응답하였다.

2.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불안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유괴·살인·강도·성폭력 등의 범죄발생으로 400명 중 223명(55.8%)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의 인재가 400명 중 74명(18.5%)이 응답하였다. 불안요인 1순위로 범죄발생과 인재의 뒤를 이어 신종바이러스나 조류독감·사스 등의 신종질병이 400명 중 52명(13%)이 응답하였고, 전쟁이나 북핵 등의 국가안보는 400명 중 25명(6.3%)이 불안요인 1순위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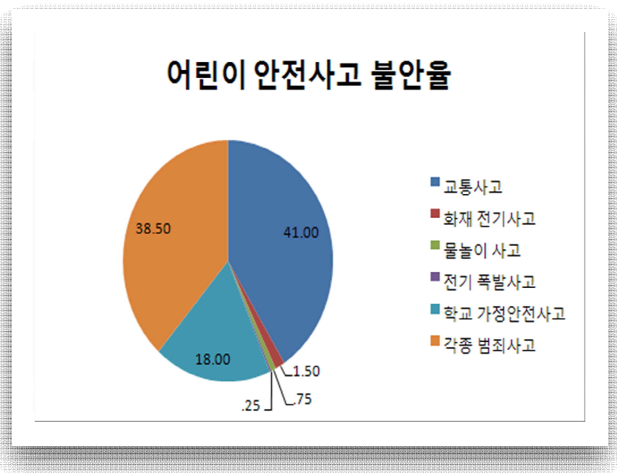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2순위를 묻는 질문에 신종질병이 400명 중 130명(32.5%)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인재가 400명 중 111명(27.8%)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2순위 요인은 신종질병, 인재 다음으로 범죄발생, 환경오염, 자연재해, 국가안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3순위 요인으로는 400명의 응답자 중 139명(34.8%)이 신종질병을 선택하였으며, 그 뒤로 인재, 환경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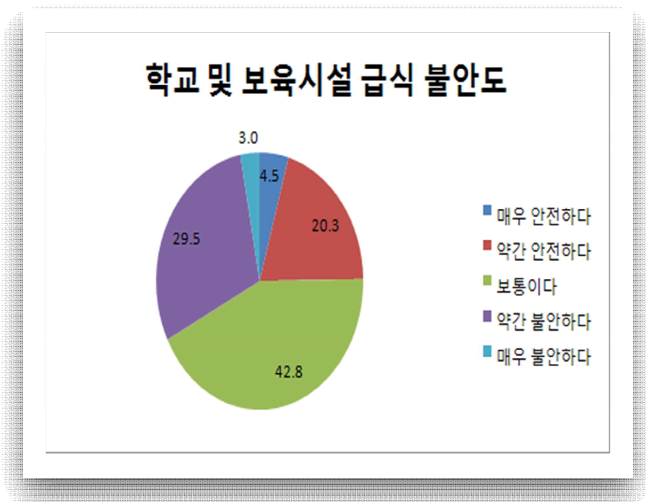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불안한 사고유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명 중 164명(41%)이 교통사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각종 범죄사고가 400명 중 154명(38.5%)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중 불안한 사고는 교통사고, 범죄, 학교·가정안전사고, 화재·전기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범죄사고,



<그림 20> 어린이 안전사고 불안율

학교·가정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어린이 안전사고 불안함에 대한 전체 사고유형 중 97.5%를 차지하는 등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도에 대한 조사 결과 400명 중 171명(42.8%)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불안하다는 의견이 118명 응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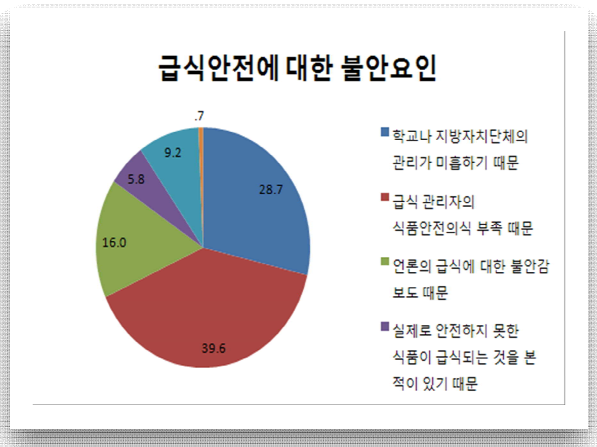


<그림 21> 학교 및 시설 급식 불안도

29.5% 차지했고, 약간 안전하다고 81명(20.3%)이 응답하였다.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하여 400명 중 12명이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118명이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등 약 32.5%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하여 400명 중 18명이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81명이 약간 안전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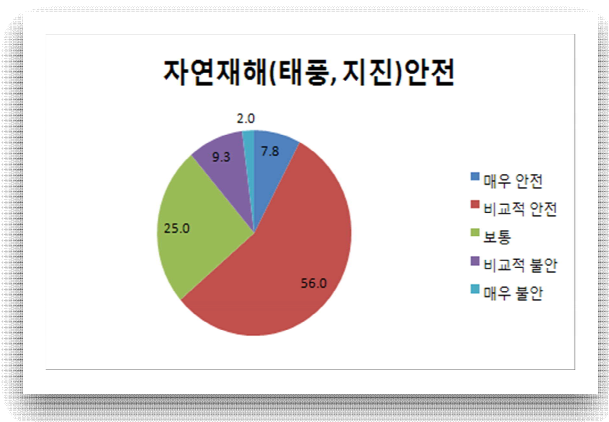
응답하는 등 약 24.8%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요인의 조사 결과 전체 293명 중 118명 (39.8%)이 급식 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3명 중 84명이 응답하여 28.7%를 차지하고 있다. 급식안전의 불안요인으로는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가 16%,



<그림 22>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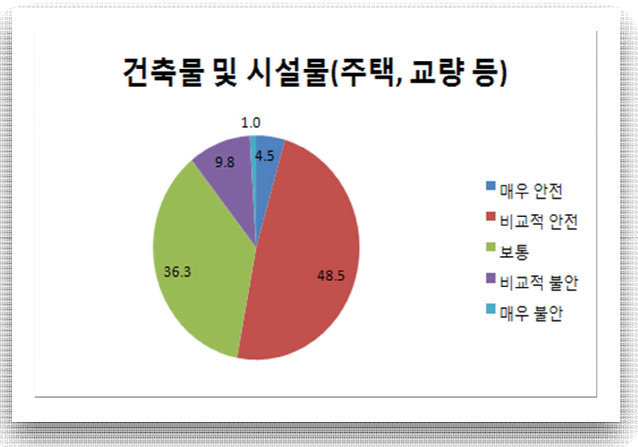
급식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9.2%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실제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 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개인위생관리와 원산지 미표시 불신이 각각 293명 중 한 명씩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자연재해 안전의 불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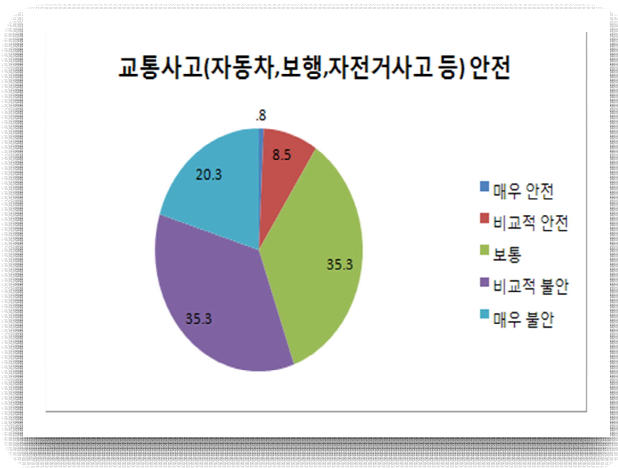
400명 중 255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는 등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45명으로 1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교량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불안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00명 중 194명(48.5%)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400명 중 145명 응답으로 36.3% 차지했고,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39명(9.8%) 응답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불안도는 매우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의 합이 전체 400



〈그림 24〉 건축물 및 시설물 불안도

명 중 212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43명으로 10.8%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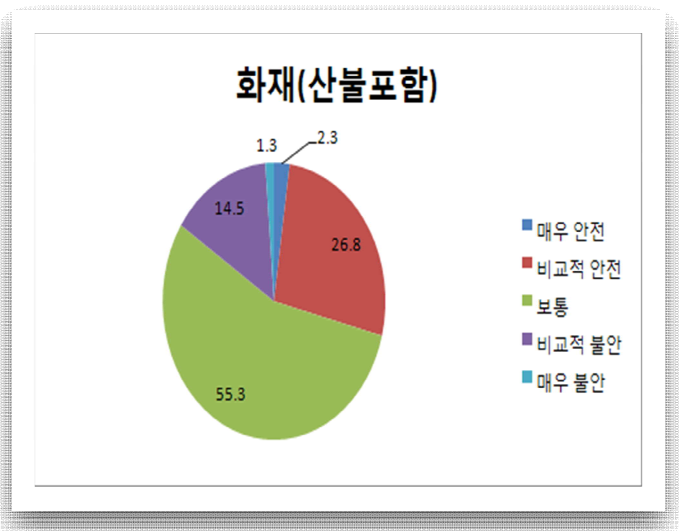


<그림 25> 교통사고 안전의 불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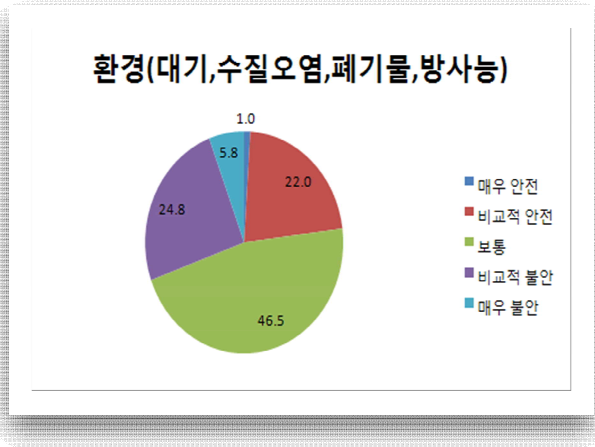
자동차, 보행, 자전거사고 등의 교통사고 안전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과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전체 400명 중 141명(35.3%)씩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도는 보통이라는 의견과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 외에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안전하다는 의견이 0.8%

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과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이 합쳐 55.6%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을 포함하여 화재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전체 400명 중 221명(55.3%)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107명(26.8%)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화재에 관한 불안도는 보통이라는 의견 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26.8%)과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14.5%)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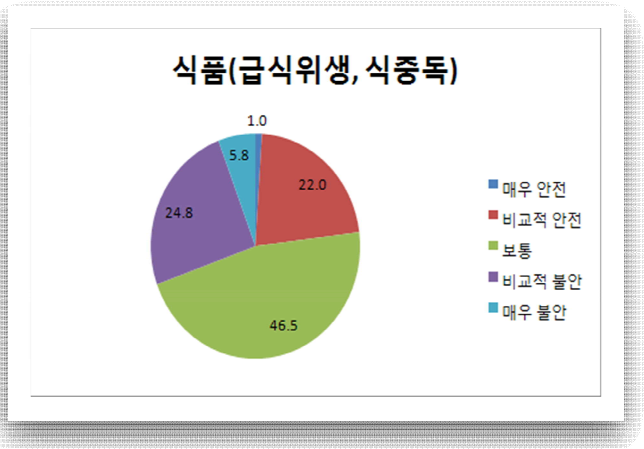
<그림 26> 화재에 대한 불안도



〈그림 27〉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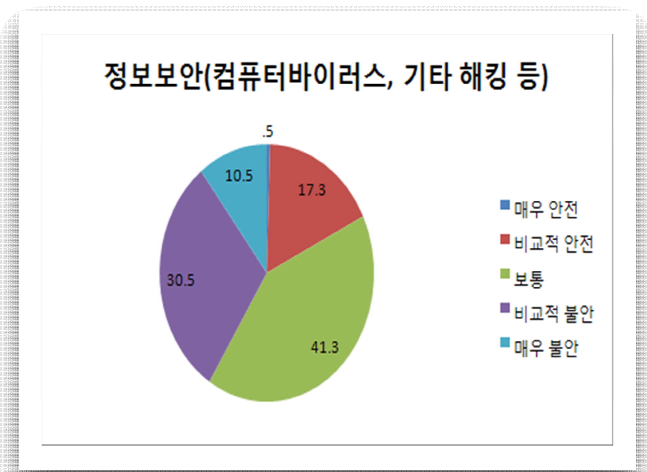
났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88명으로 22%로 나타났다. 자연재해에 대해 400명 중 23명(5.8%)이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위생,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전체 400명 중 198명(49.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과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는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120명으로 30%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66명으로 16.5%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과 매우 안전하다는 의견은 각각 3.5%, 0.5%로 나타났다.



〈그림 28〉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방사능 등의 환경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전체 400명 중 186명(46.5%)이 응답하였고,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과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치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도는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99명으로 24.8%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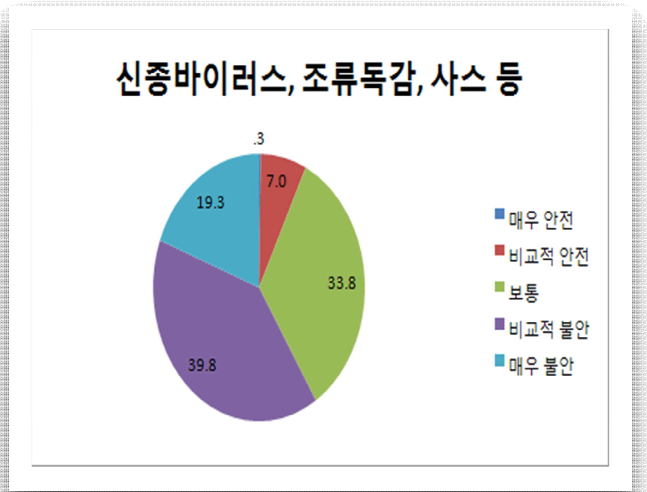


<그림 29>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도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의 정보보안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전체 400명 중 165명(41.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도는 보통이다, 비교적 불안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 매우 안전하다는 순서로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정보보안에 대해서 400명 중 비교적 불안하다가 122명, 매우 불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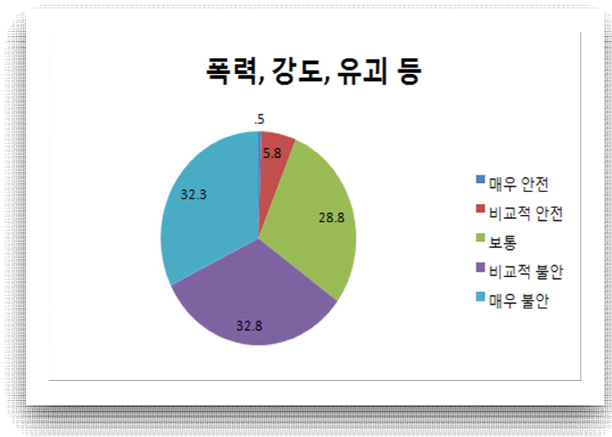
다가 42명 응답하는 등 불안하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하였다.

신종바이러스, 조류독감, 사스 등의 신종질병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400명 중 159명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과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도는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이 39.8%, 보통이라는 의견이 33.8%



<그림 30>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도

나타났으며,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과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각 19.3%와 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질병에 대해서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과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이 합쳐 59.1%로 과반수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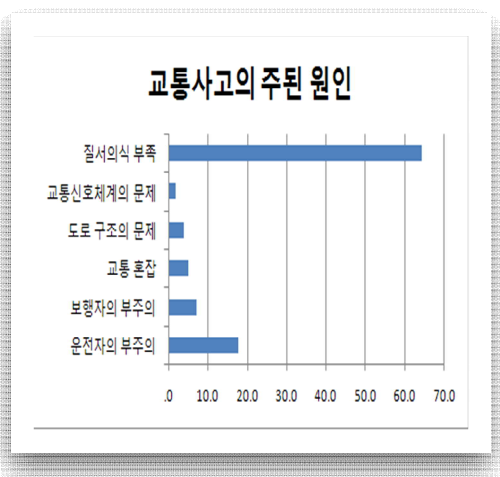
<그림 31> 폭력, 강도, 유괴 등의 불안도

폭력, 강도, 유괴 등에 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불안하다는 응답이 400명 중 13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폭력, 강도, 유괴 등에 대해서 비교적 불안하다는 응답이 32.8%,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32.3%, 보통이라는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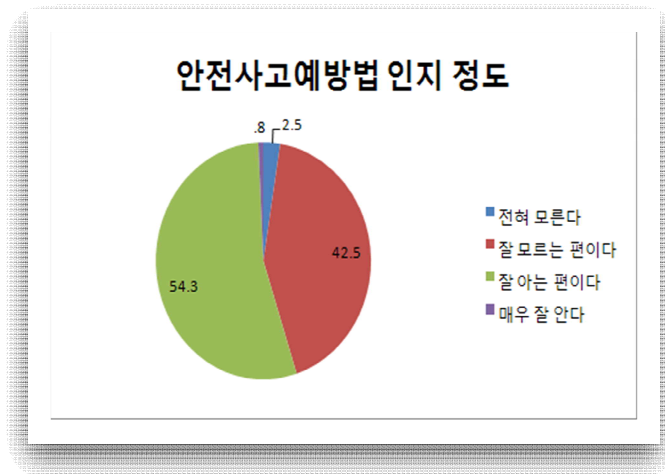
28.8% 나타났다. 폭력, 강도, 유괴 등에 대해서 비교적 불안하다는 의견과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이 합쳐 65.1%로 과반수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폭력, 강도, 유괴 등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거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0명 중 25명으로 6.3%에 그치고 있다.

3.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태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전체 400명 중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라는 의견 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교통 혼잡 때문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도로구조의 문제나 교통 신호체계의 문제 등 교통시설물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다.



<그림 32>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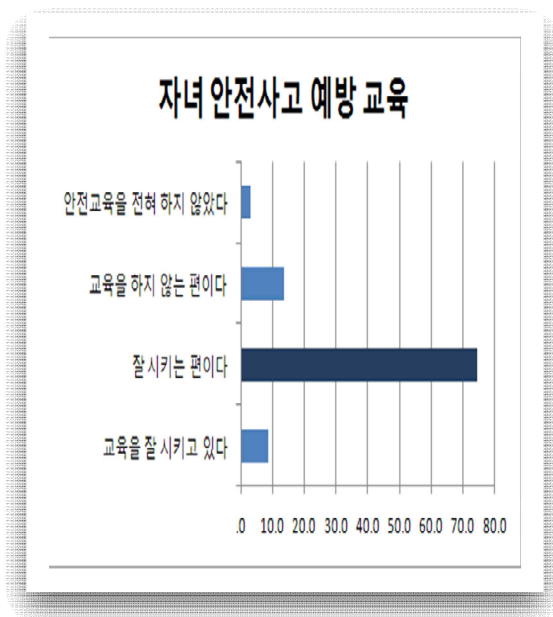


<그림 33>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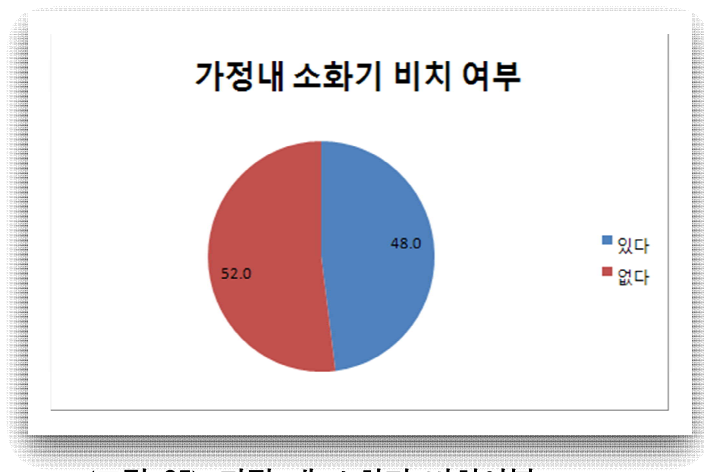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전체 400명 중 217명(54.3%)은 잘 아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42.5%에 해당하는 170명은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대답한 경우는 400명 중 3명으로 0.8%에 그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전

혀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400명 중 10명으로 2.5%에 해당한다.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400명 중 298명으로 74.5%를 차지했다.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35건)와 잘 시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298건)는 전체의 83.3%에 해당한다.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13건)와 교육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54건)는 전체의 16.8%에 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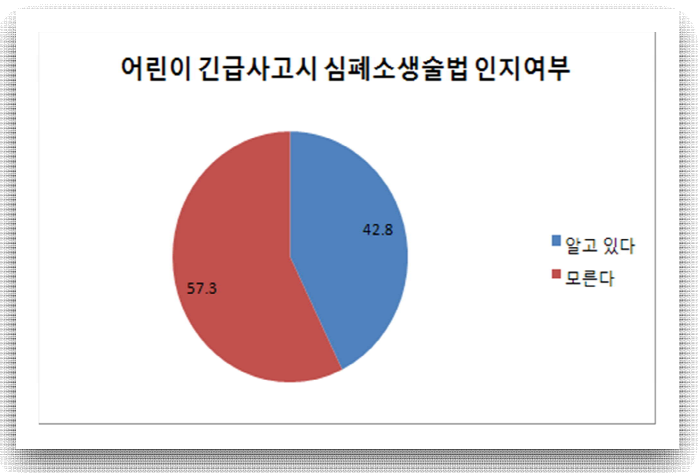
<그림 34> 자녀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부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400 가구 중 192가구로 48%를 차지했다. 가정 내 소화기 비치율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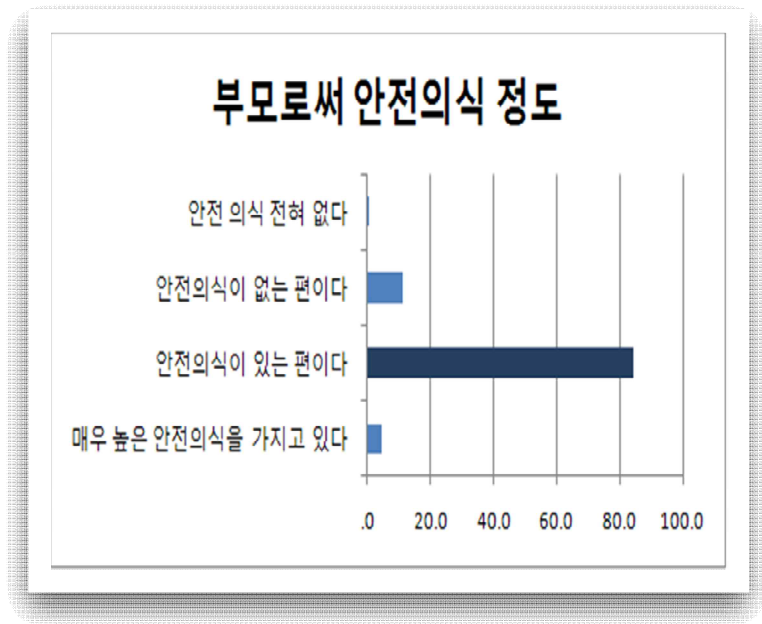
<그림 35> 가정 내 소화기 비치여부

어린이 긴급사고시 필요한 심폐소생술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00명 중 42.8%에 해당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법의 인지도는 42.8%로 57.3%는 심폐소생술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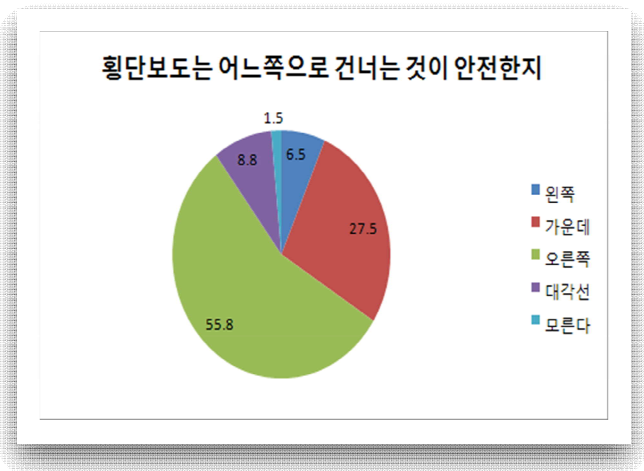
<그림 36> 심폐소생술법 인지여부

부모의 안전의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400명 중 84.5%를 차지하는 338명은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400명 중 44명은 안전의식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에 해당하는 17명은 매우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약 88.8%의 응답자가 매우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있거나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안전의식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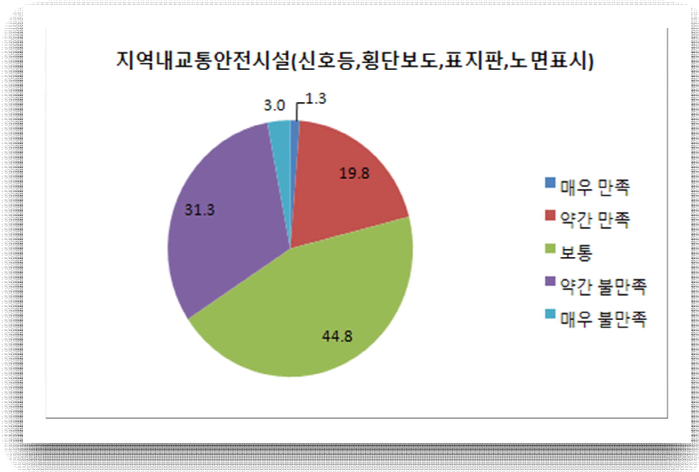


〈그림 37〉 부모로써 안전의식 정도

하지만 본 연구자가 설문시,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0명 중 223명(55.8%)은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운데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5%로 나타나는 등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에 대해 44.2%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횡단보도 안전횡단법 인지도부



〈그림 39〉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4.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1.3%는 약간 불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9.8%는 약간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지역 내 안전시설에 대하여 34.3%는 약간 불만족 하거나 매우

불만족 하는 등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1.1%는 매우 만족하거나 약간 만족하는 등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3절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1. 기존 프로그램 이용 태도

대전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96.3%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률은 3.8%로 400명 중 15명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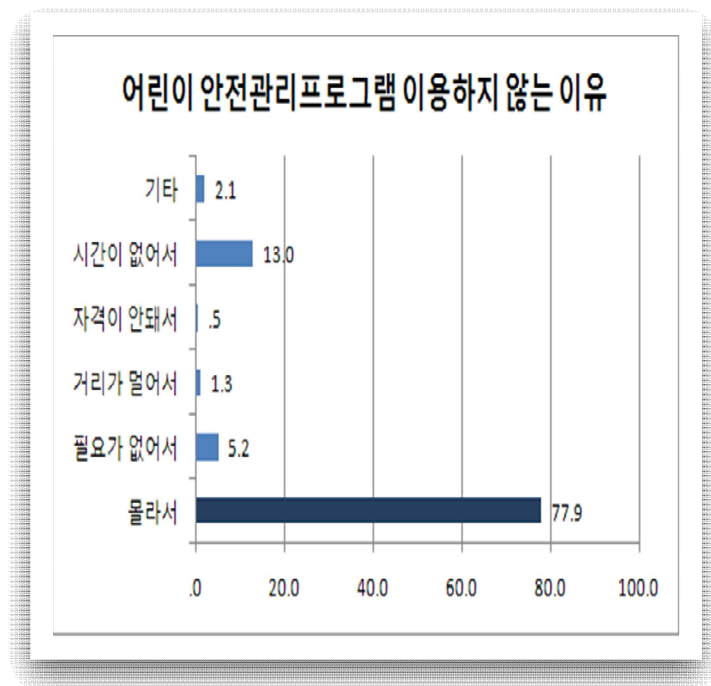


<그림 40> 대전시 안전 프로그램 이용여부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15명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 중 스킨존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4명, 미아 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3명,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용자는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불량식품 감시단, 대전 어린이 회관,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 스쿨 푸드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385명의 응답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외에 시간이 안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5명 중 50건으로 13%를 차지했고,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5명 중 20명으로 5.2%를 차지했다. 이 밖에 기타가 약 2.1%, 거리가 멀어서가 1.3%, 자격이 안돼서가 0.5%를 차지하였다. 385건 중 8

건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 중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 4건으로 약1%를 차지했으며, 시간 날 때마다 직접 교육을 한다는 의견과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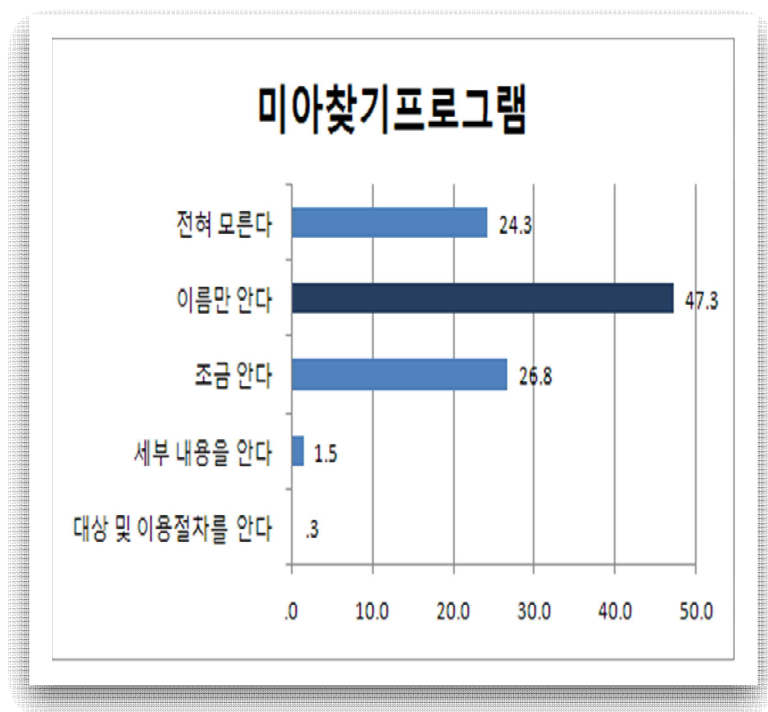
<그림 41>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은 이유

2. 세부 추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1) 어린이 실종사고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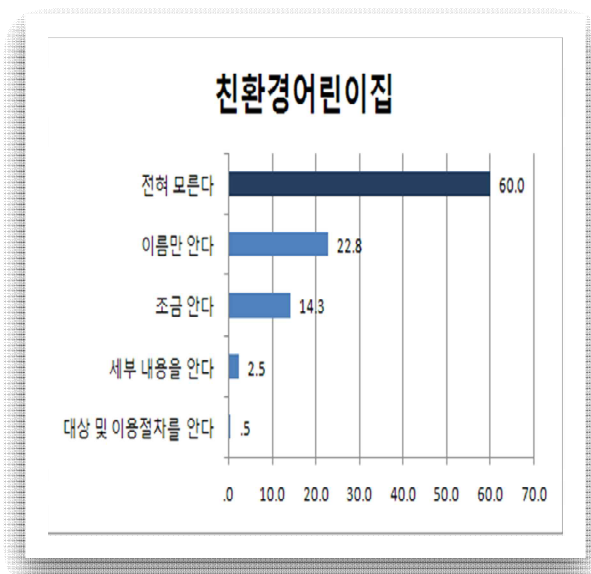
어린이 실종신고 번호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물음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00명 중 168명 응답으로 42%를 차지했으며, 어린이 실종신고 번호라는 이름만 아는 경우가 41.3%로 비슷한 응답률이 나타났다. 어린이 실종신고 번호를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8%이며, 세부 내용을 아는 경우와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아는 경우는 각 2%와 1%에 그치고 있다.

미아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00명 가운데 이름만 조금 아는 경우는 189명으로 47.3%를 차지했고, 약 98%는 조금 알거나 이름만 알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미아 찾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금 아는 경우는 26.8%, 전혀 모르는 경우는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아 찾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아는 경우와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아는 경우는 각 1.5%와 0.3%에 그치고 있다.



<그림 42> 미아찾기 프로그램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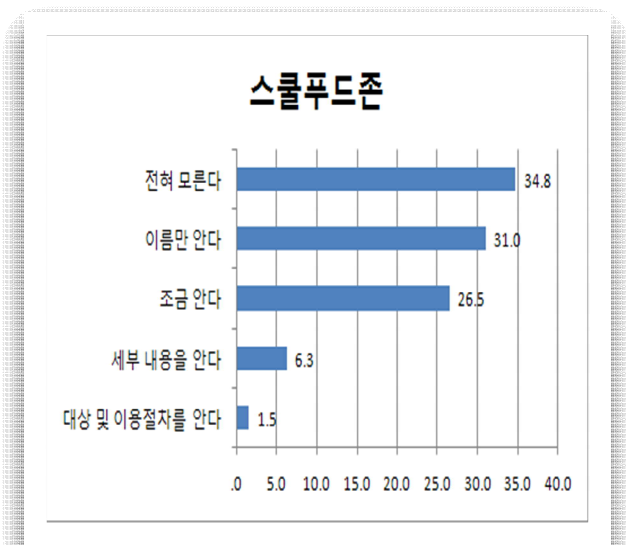
부모 아토피 관리 교실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에 해당하는 253명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은 전혀 모른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모 아토피 관리 교실에 대해 이름만 아는 경우는 22.8%에 해당하며, 조금 아는 경우와 세부 내용을 아는 경우가 각 12%와 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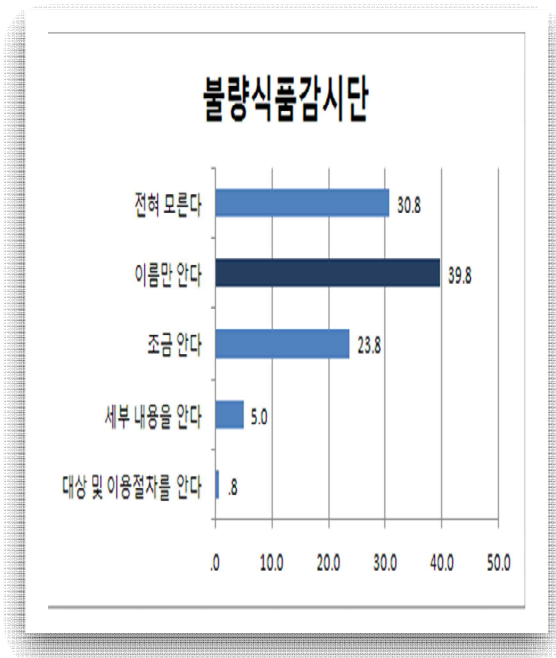
<그림 43> 친환경어린이집 인식도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40명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름만 아는 경우는 400명 중 91명으로 22.8%가 해당하였고, 조금 아는 경우는 14.3%를 차지했다. 반면에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아는 경우는 0.5%에 그치고 있다.

스쿨푸드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스쿨푸드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4.8%, 이름만 아는 경우는 31%, 조금 아는 경우는 26.5%로 나타났으며, 스쿨푸드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알거나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아는 경우는 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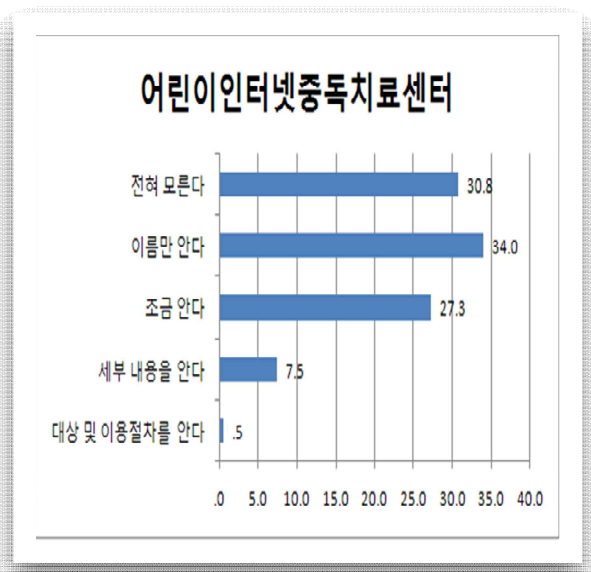


<그림 44> 스쿨푸드존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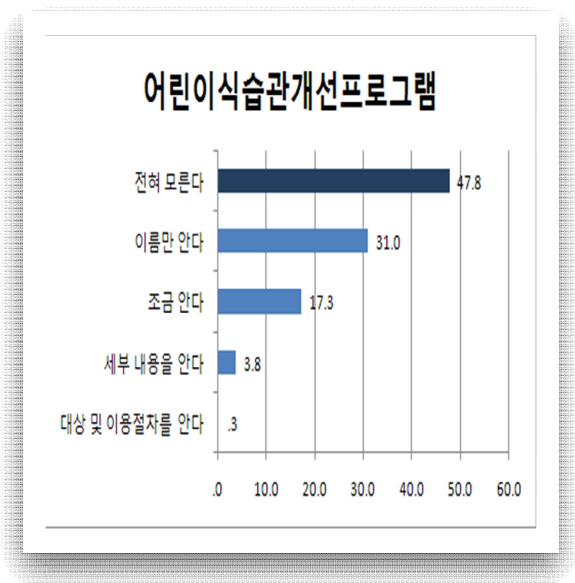
〈그림 45〉 불량식품감시단 인식도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센터에 대하여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름만 아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 조금 아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센터에 대해 이름만 아는 경우는 34% 해당했으며, 전혀 모르는 경우는 30.8%, 조금 아는 경우는 27.3%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센터에 대해 400명 중 30명은 세부 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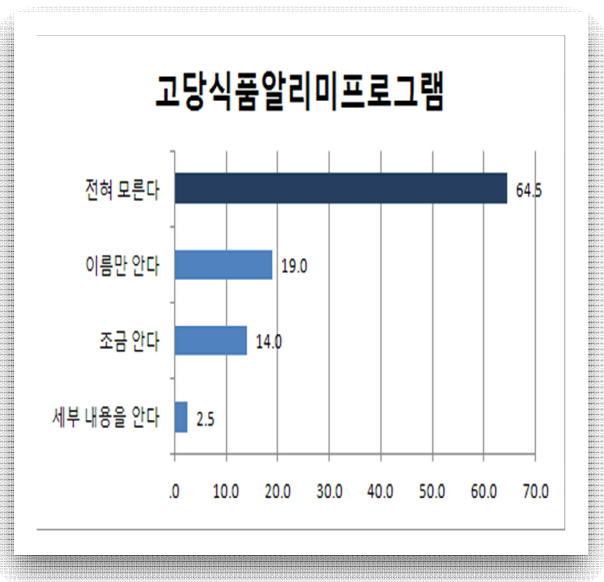
〈그림 46〉 어린이 인터넷 중독치료센터 인식도

불량식품 감시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이름만 아는 경우가 3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불량식품 감시단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0.8%,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를 차지하였고, 불량식품 감시단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알거나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아는 경우는 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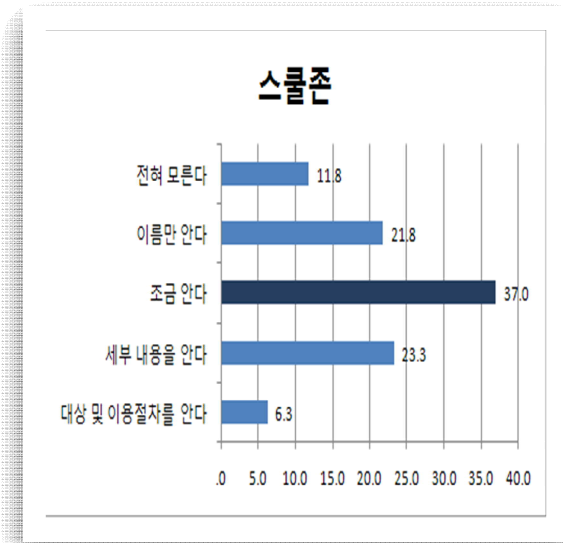
〈그림 47〉 어린이 식습관개선 프로그램 인지도

고당 식품 알리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64.5%에 해당하는 258명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고당 식품 알리미 프로그램에 대하여 19%는 이름만 안다고 응답하였고, 14%는 조금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8〉 고당식품 알리미 프로그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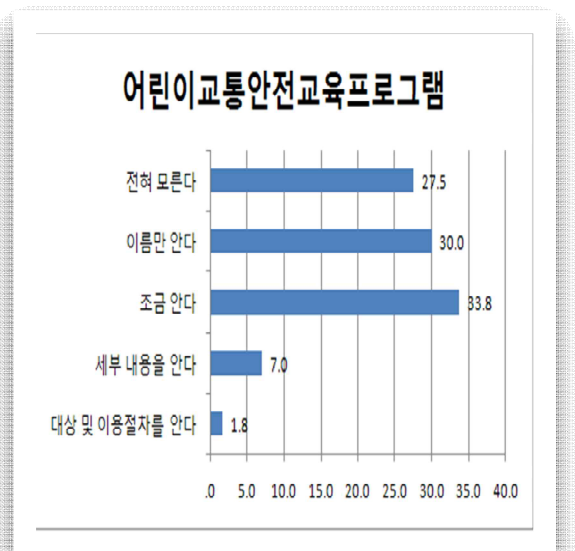
어린이 식습관 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른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는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프로그램에 대하여 절반에 가까운 47.8%의 응답자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 식습관 개선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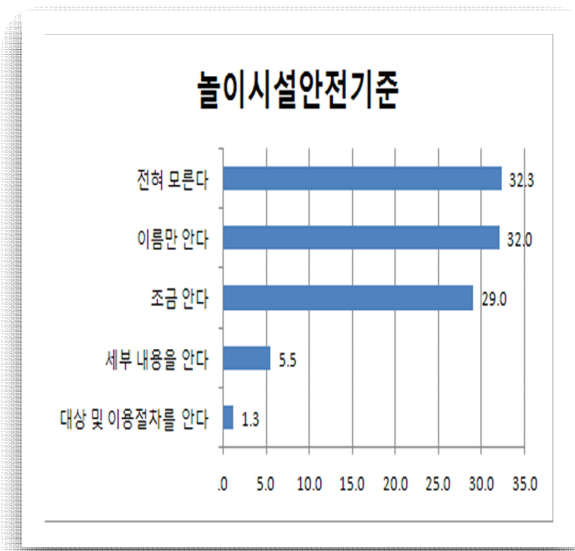
<그림 49> 스쿨존 프로그램 인식도

스쿨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 안다는 응답이 응답자 400명 가운데 148명의 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스쿨존 프로그램을 37%는 조금 안다고 응답하였고, 23.3%는 세부 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21.8%는 이름만 안다고 응답하였고, 스쿨존에 대하여 11.8%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6.3%는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 안다, 이름만 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세부 내용을 안다는 응답과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는 응답도 있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33.8%는 조금 안다고 응답하였고, 30%는 이름만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27.5%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7%는 세부 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1.8%는 대상 및 이용절차를 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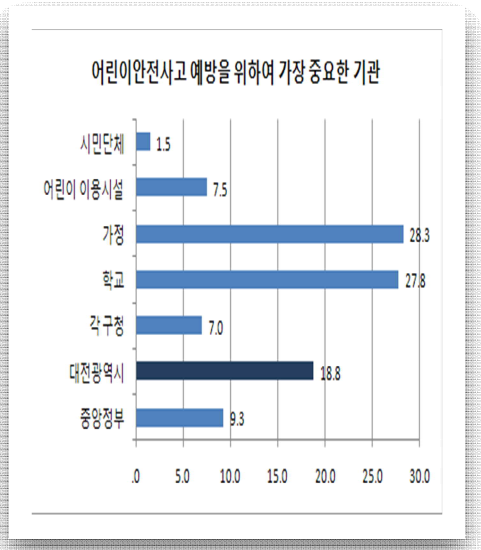
<그림 50>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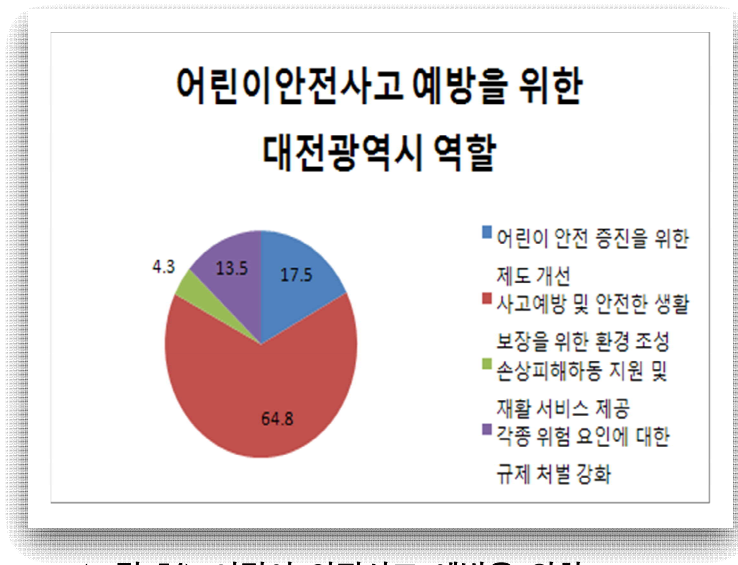
<그림 51> 놀이시설 안전기준 인식도

놀이시설 안전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름만 아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조금 아는 경우가 그 뒤로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 400명 중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129명, 이름만 아는 경우는 128명으로 각 32.3%, 32%를 차지하였다.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대해 29%는 조금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아는 경우는 5.5%에 해당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슷한 수치로 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8.3%와 27.8%는 각각 가정과 학교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대전광역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75명으로 18.8%가 해당하였다. 이 밖에 중앙정부, 어린이 이용시설, 각 구청, 시민단체 순서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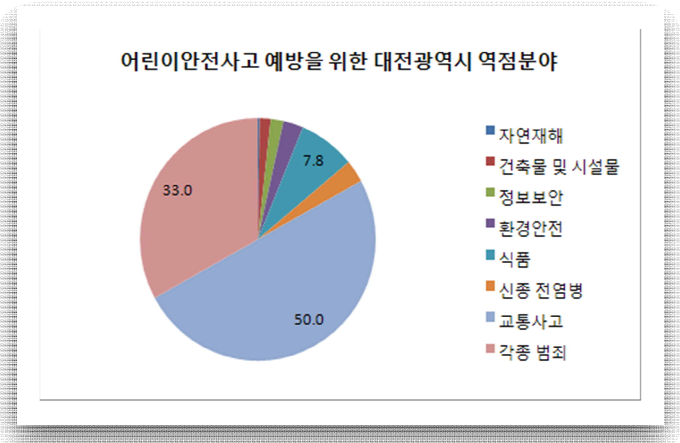
<그림 5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그림 5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역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13.5%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를 차지한 것은 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교통사고 분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각종 범죄로 33%의 응답자가 각종 범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급식 위생, 식중독 등의 식품분야가 7.8%, 신종 전염병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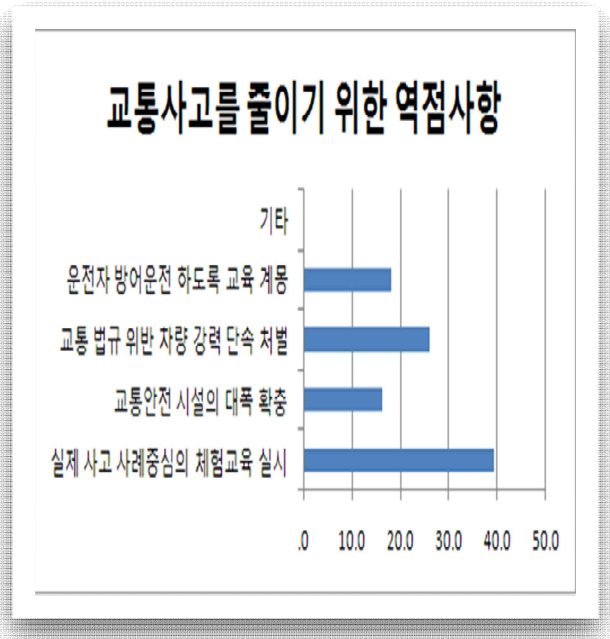


<그림 5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역점분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64.8%가 응답하였으며, 17.5%는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대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안전 부문이 2.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바이러스, 해킹 등의 정보보안 부문(1.8%)과 주택, 교량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 부문(1.5%),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부문(0.3%)은 상대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채택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어릴 때부터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으로 400명 중 157명(39.3%)이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26%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 안전 운전 하도록 교육·계몽 하는 것이 18.3%를 차지했고, 교통안전 시설의 대폭 확충이 16.3%를 차지하였다.



<그림 55>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역점사항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를 1순위로 31.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사업 중 아동 관련 법 다음으로 우선시 한 항목은 안전설비 설치 및 점검 사업과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각 19.3%와 15.8%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2순위로 선택한 사업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로 22.25%를 차지했으며, 안전설비 설치 및 점검과 지역 내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가 비슷한 수치로 18% 내외의 채택률을 보였다. 3순위로 선택한 사업으로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가 13.75%로 가장 큰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표 36>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1·2·3 순위

구분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63	15.8	36	9	27	6.75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	43	10.8	69	17.25	55	13.75
안전설비 설치 및 점검	77	19.3	74	18.5	72	18
아동안전 관련법·제도 정비 및 강화	125	31.3	89	22.25	50	12.5
지역 내 안전 네트워크 구축 운영	44	11	70	17.5	45	11.25
아동제품 안전기술 지원	8	2	13	3.25	41	10.25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홍보 확대	25	6.3	30	7.5	68	17
자전거 안전교육	15	3.8	19	4.75	42	10.5
합계	400	100	400	100	400	100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1.25%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1순위 사업으로 19.75%의 응답자가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선택했으며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도 16.25%의 응답자가 채택하였다. 2순위 사업으로는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가 23%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채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가 14.7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3순위 사업으로는 2순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가 16.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먹거리 감시단 운영이 14.75%를 차지하였다.

<표 37>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 1·2·3 순위

구분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39	9.75	16	4	33	8.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85	21.25	44	11	38	9.5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	65	16.25	92	23	65	16.25
아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8	4.5	20	5	21	5.25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	79	19.75	59	14.75	51	12.75
유해물질 관리 강화	22	5.5	32	8	33	8.25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16	4	31	7.75	23	5.75
어린이 놀이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3	8.25	36	9	43	10.75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28	7	38	9.5	34	8.5
어린이 먹거리 감시단 운영	15	3.75	32	8	59	14.75
합계	400	100	400	100	400	100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400명 중 154명에 해당하는 38.5%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를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순위 사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27.75%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2순위 사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2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 의견이 23.5% 차지하였다. 3순위 사업으로는 학교 내 CCTV 설치 사업과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이 근사한 비율로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각각 19.25%와 18.75%를 차지하였다.

<표 38> 안심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1·2·3 순위

구분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강화	154	38.5	94	23.5	56	14
배움터 지킴이 사업	5	1.25	13	3.25	29	7.25
학교 내 CCTV 설치	67	16.75	68	17	77	19.25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3	0.75	21	5.25	33	8.25
실종아동찾기 시스템 구축	9	2.25	22	5.5	33	8.25
가정·성 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24	6	40	10	53	13.25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27	6.75	38	9.5	44	11
아동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11	27.75	104	26	75	18.75
합계	400	100	400	100	400	100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34.75%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순위 사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채택률을 보인 사업은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75%의 응답자가 1순위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2순위 사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로 29.5%의 응답자가 응답하였으며,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사업과 안전교육 기반마련 및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은 모두 23%의 응답자가 각각 3순위 사업 중 가장 많은 채택률을 보였다.

<표 39> 손상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 사업 1·2·3 순위

구분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115	28.75	66	16.5	92	23
안전교육 기반마련 및 안전교육 활성화	68	17	82	20.5	92	23
아동전용 손상병원 지정운영	22	5.5	40	10	46	11.5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	56	14	118	29.5	79	19.75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139	34.75	94	23.5	91	22.75
합계	400	100	400	100	4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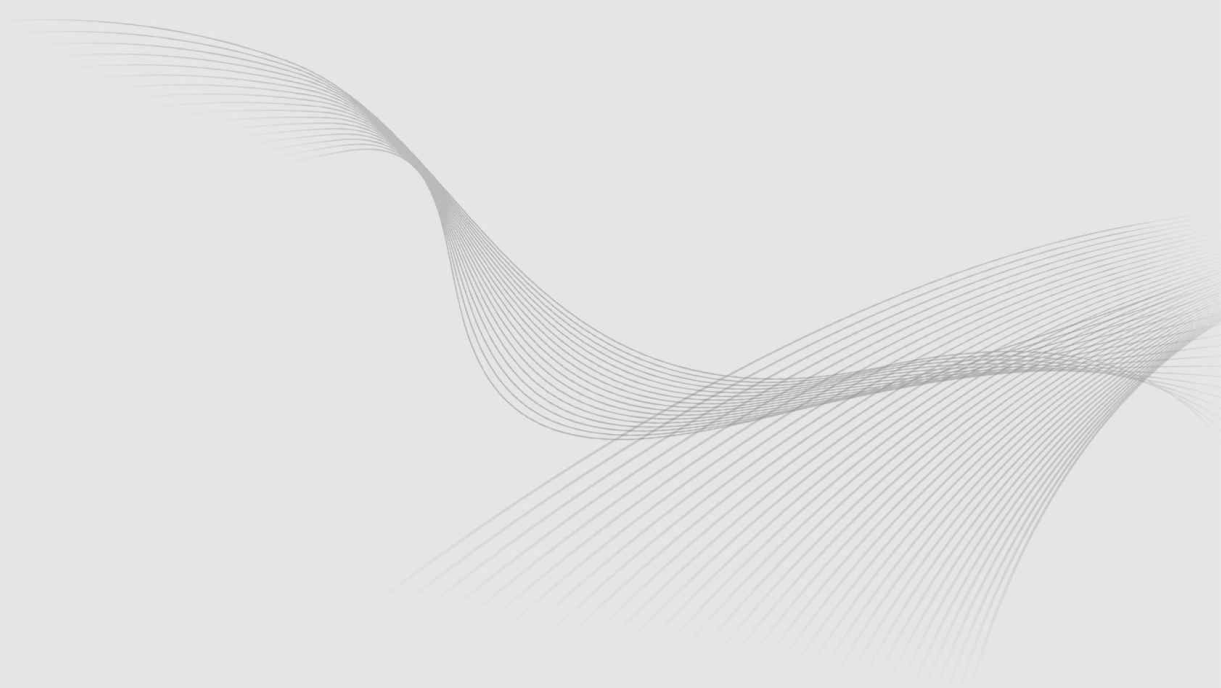
제 5 장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제1절 연구 및 분석결과 종합

제2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제3절 어린이 안전 세부 실천 과제



제 5 장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제1절 연구 및 분석결과 종합

1.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

통계청의 사망원인 조사자료를 통하여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전광역시 어린이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사고(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연령대에서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을 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육상, 수상, 항공 및 기타 포함)로 10만 명당 5.4명이 감소했고, 다음은 추락사고, 익사사고로 각각 2.1명, 1.8명 감소하였다.

15세-19세의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또한 15세 미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분석결과,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사고의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서, 향후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대전의 어린이 사고 유형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0-19세 사망자수 중 대전의 해당연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추락사고이며, 자살사고, 운수사고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타살사고와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2.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1)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우선 검토해 보았다. 내용 검토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의조항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조항을 살펴 본 결과,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린이의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져 안전에 위협을 받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영양표시도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의 경우 강제규정화 되어 있음은 일견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 법 조항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 번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3조 시설장과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관련교육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앙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어린이 안전관리와 연관된 중앙부처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관계 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아동안전은 여러 부처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행정조직 대부분이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아동안전사업을 아동의 권리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사고에 대한 문제를 아동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동안 아동정책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어린이안전관련 사업이나 정부 시책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고사망 외에 사고와 관련된 상해를 입는 아동의 수와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대단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사고후 비합리적인 처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3) 대전시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결과

그동안 대전시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자리 매김한 바 있으며,- 각종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 등 많은 정책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정부 추진 사업 검토에서 나타난 정책의 산발성, 비체계적인 대응, 예방적 조치의 미흡 등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해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부터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책지원은 사후 처방식의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단속·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이 관련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 체계적 사업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전시도 아동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1)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대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400명의 응답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안전 사고는 가정안전사고, 놀이터사고, 자전거·인라인 사고 순으로 안전사고 경험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후 취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가족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응답자 258명 중 148명(5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관련기관에 의뢰 조치한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불안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유괴·살인·강도·성폭력 등의 범죄발생으로 400명 중 223명(55.8%)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의 인재가 400명 중 74명(18.5%)이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불안한 사고유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명 중 164명(41%)이 교통사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각종 범죄사고가 400명 중 154명(38.5%)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전체 400명 중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으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라는 의견 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교통 혼잡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전체 400명 중 217명(54.3%)은 잘 아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42.5%에 해당하는 170명은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400명 중 298명으로 74.5%를 차지하였으며,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400 가구 중 192가구로 48%를 차지. 어린이 긴급사고시 필요한 심폐소생술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00명 중 42.8%에 해당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안전의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400명 중 84.5%를 차지하는 338명은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0명 중 223명(55.8%)은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운데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5%로 나타나는 등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에 대해 44.2%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높은 데 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나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식과 태도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현재 대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96.3%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385명의 응답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8.3%와 27.8%는 각각 가정과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전광역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75명으로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

사한 결과 응답자 중 64.5%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7.5%는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13.5%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를 차지한 것은 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교통사고 분야로 나타났고, 각종 범죄예방이 33%, 이 밖에 급식 위생, 식중독 등의 식품분야가 7.8%, 신종 전염병이 3%, 대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안전 부문이 2.8%를 차지하였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어릴 때부터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으로 400명 중 157명(39.3%)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26%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 안전운전 하도록 교육·계몽 하는 것이 18.3%, 교통안전 시설의 대폭 확충이 16.3%를 차지하였다.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를 1순위로 31.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선시 한 항목은 안전설비 설치 및 점검 사업과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각 19.3%와 15.8%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1.25%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19.75%의 응답자가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선택했으며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도 16.25%의 응답자가 채택하였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400명 중 154명에 해당하는 38.5%가 학

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를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27.75%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34.75%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채택률을 보인 사업은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75%의 응답자가 1순위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제2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1. 감소목표 설정

앞선 연구결과에 비추어, 향후 5년 간 추진하게 될 어린이 안전관리 성과관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뚜렷한 전략적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상자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OECD에서 권고하는 연차적 감축 안을 참조하여 2015년까지 매년 감축목표를 조정하여 설계하며, 이에 맞추어 매년 성과평가를 해 두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계획 첫 해인 2012년과 2013년의 감축목표를 설정 하고, 2015년까지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를 OECD의 현재수준으로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0〉 사고에 따른 사망 및 부상 감소 목표

추진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감축목표	-	10%	10%	8%	7%	5%
교통사고 발생건수	496	446	402	370	3443	327
교통사고 사망자	6	5	5	4	4	4
교통사고 부상자 수	605	545	490	451	419	398
보행 시 사고 사망자	2	2	2	2	1	1
보행 시 사고 부상자	250	225	203	186	173	165
통학버스 사고 사망자	2	2	2	1	1	1
통학버스 사고 부상자	49	44	40	37	34	32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건수	66	59	53	49	46	43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1	1	1	0	0	0
어린이보호구역 부상	92	83	75	69	64	61

〈표 41〉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추진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진목표	-	10%	10%	8%	7%	5%
추락사고 사망자	3	3	2	2	2	2
익사사고 사망자	1	1	1	0	0	0
화재사고 사망자	1	1	1	0	0	0
중독사고 사망자	0	0	0	0	0	0
자살사고 사망자 (19세미만)	15	14	12	11	10	10
타살 사망자 (19세미만)	1	0	0	0	0	0
아동학대 사망자 (19세미만)	4	4	3	2	2	2
외상성뇌손상 사망자 (19세 미만)	9	8	7	7	6	6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대상 확대	16곳	14곳	13곳	12곳	12곳	10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	330개소	380개 소	400개 소	전체	전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788개소	800개 소	1000개 소	1100개 소	전체	전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15개소	18개소	20개소	30개소	40개소	50개소
자전거전용도로	227.5Km	280	300	300	300	300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13만 명	15만 명	18만 명	20만 명	22만 명	25만 명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 면허 취득	1,328명	1,500명	1,8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자전거 시범 및 선도학교 지정 운영	20개	30개	30개	40개	40개	50개
자전거 녹색봉사대	250명	280명	300명	300명	350명	400명
배움터 지킴이 요원 확대	200명	250명	250명	300명	300명	3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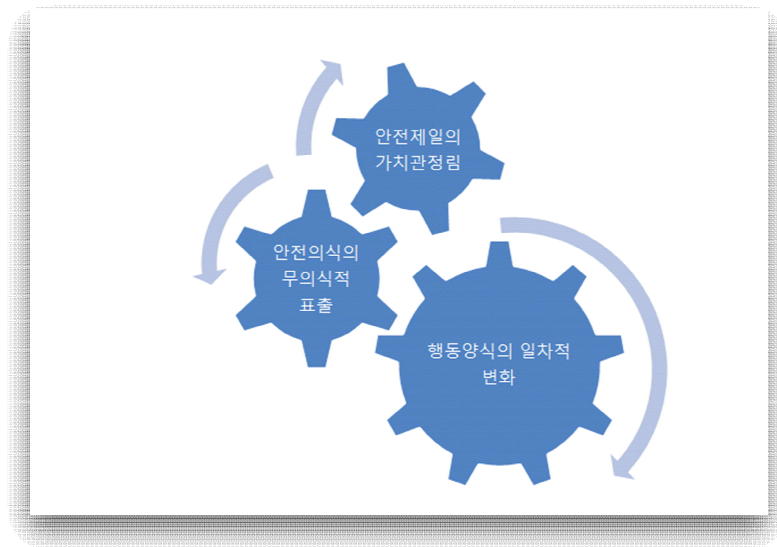
추진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진목표	-	10%	10%	8%	7%	5%
친한 친구교실 운영	146개교	150개교	150개교	180개교	180개교	200개교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165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	43개교	50개교	60개교	60개교	80개교	100개교
학교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	260명 연 2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연 2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안전건물 비율 확대	77.6%	80%	80%	85%	85%	90%

2. 안전사고 감소 추진 전략

1) 안전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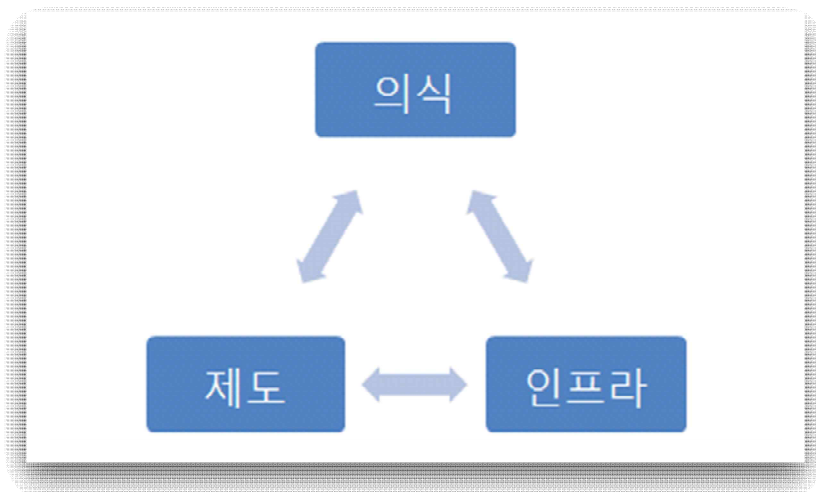
어린이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예방적 조치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정책 또한 이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차기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적 안전관리 활동 및 안전의식 마인드 제고, 안전감시의 생활화, 범시민적 안전문화 운동의 동참을 통한 안전 생활화의 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림 57> 안전문화의 3대 원칙

또한, 대전광역시민의 의식 속에 안전에 대한 일상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동시 점검이 필요하며, 3가지 축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그림 58> 안전문화의 3대 축

다시 말하면, 대전광역시의 생활주변에 각종 사고위험요인이 증대하며, 미비한

관리체계와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후진성 사고가 빈발, 사회적 손실은 물론 사회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범시민적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시민들에게 안전사고의 실상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 후 이 위기감을 스스로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방치할 경우 나와 우리가족이 안전사고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 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금 당장, 알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처방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처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의식개혁 엘리트군」을 양성토록 한다. 일본처럼 지역별로 어머니 안전 지도자를 양성하여 안전 반사회, 안전 가족회의 개최 등 구체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알리는 등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한다.

정부와 교통관련 단체들은 「의식개혁 엘리트군」이 “우리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지역민이 나서서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아낌없는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처방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경각심을 알려주는데 그치는 캠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캠페인을 보고 일반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지금부터 해야지!” 하며 즉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정성’ 이 아닌 ‘과급성’ 을 띤 캠페인이어야 적절하다. 사고 예방 내용이 참석한 사람들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이웃, 친구, 가족에게 재교육할 수 있는 과급성을 내포해야 한다.

‘일회성’ 이 아닌 ‘연속성’ 을 띤 제도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어야 한다. 안전 사고문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만 줄일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고예방 노력 못지않게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시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역점사업 추진

<표 42>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참여 대상 범위

관	대전시와 5개 구청·국회의원 시의회와 구의회 대전지방경찰청과 경찰서·교육청·소방본부
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안실련·대한노인회 등 대전의 모든 시민단체·사회, 종교단체·보험사·운수회사·언론·방송 등 80-90여개 단체

가칭 ‘대전의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사업’ 을 추진한다. 대전시의 어린이 교통 사고를 Zero화 하겠다는 각오로 대전시장이 적극 앞장서서 대전의 민·관·기업·언론·방송·종교 단체 등이 모두 힘을 합쳐 대전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큰 폭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며, 지역사회에 관련된 100여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한다.

<표 43>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수행 방법

1차	- 대전의 민·관·기업·언론·종교단체 등이 모여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를 Zero화 할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간담회 개최
2차	-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참여 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담은 어린이 안전 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 제공
3차	- 대전 어린이 안전사고 Zero Vision선포식 이후 각각 참여단체들이 활동 매뉴얼에 맞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행

대전의 어린이 안전사고 Zero운동 실천 10칙을 정하여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보급한다.

3.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일회적인 단발성 행사나 일시적 캠페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앞서 정책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 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에 급급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좀더 체계적이며, 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전시가 지역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보았다.

<표 44> 종합대책 추진의 비전

비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 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달성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가정, 학교, 보육시설, 공공장소, 지역사회 및 여가 환경 등)에서 안전한 생활 유지 - 사고 위험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운택하고 즐거운 삶 향유 - 가족의 걱정 및 불안감 감소 - 사고로 인한 각계의 혼란 및 갈등 방지 -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지역경쟁력 극대화 - 사고감소율 제고(20% 감축)
정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사고예방 및 안전 인식과 참여 증진 - 어린이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어린이안전정책 기반 조성 - 기관별 부서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통합 -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 -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 주요부분별, 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4. 실천전략

어린이의 사고예방 및 안전 인식과 참여를 증진토록 어린이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인식 수준을 제고하며, 어린이 사고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사업장, 공공장소, 학교, 가정, 도로, 스포츠와 여가 환경, 특별한 환경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을 격려하고, 어린이 사고예방에 대한 실천방법의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사고예방 실천을 위한 참여를 격려하고 자극함으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천 전략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어린이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사고가 발생된 이유와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공공캠페인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기술을 개발토록 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의 사고예방 능력과 역량을 증진토록 하며, 교육프로그램과 과정을 제정함으로써 학년과 교과과정에 사고예방을 통합하도록 하고,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정토록 한다. 그리고 사고예방 연구 센터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들을 지지하고 중요한 사고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한다.

세 번째는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과 관련한 실천 전략이다. 우선,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시스템, 제품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 시스템, 제품의 안전한 디자인과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구매결정을 할 때 사고예방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네 번째는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안전정책 기반 조성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예방을 촉진시키고 지지하는 필수적인 기준

과 정책, 규제의 준수를 강화하고, 사고예방 전망을 통해 규제와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촉진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 규제와 정책을 발달시키고 이행토록 한다.

다섯 번째 실천전략은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의 통합관리이다. 중앙정부, 대전시, 기업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사고예방을 위한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예방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협조 메커니즘을 확립하거나 강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분야(조직체, 지역사회, 지역, 국가)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와 협조를 위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는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향상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어린이 관련 사고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조사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들의 인구학적, 지리적, 사회 경제적 특성, 기초적인 조사와 더 즉각적인 사고에 기여하는 요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을 위한 기회의 의미로 특별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자료를 대조하고 분석하며, 적절하고 포괄적인 사고 통계 자료와 사고 기초 자료의 협조와 증대를 통해 사고 감시 시스템을 향상토록 한다. 그리고 사고예방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입과 그 효과성에 대한 사고통계와 정보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 전문가와 실천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과 생활자들에게 보급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일곱 번째는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이다. 사고위험이 가장 큰 집단들, 사고발생 장소, 사고환경을 확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거나 핵심적 책임을 가지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집단을 위한 개입방법을 확보한다. 또한 효과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핵심 특징을 확인하고, 개입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지식들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사고당사자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고당사자, 가족, 중요 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사고 상황, 응급의료처리 및 양질의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대처 서비스,

응급치료, 재활센터들이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개입을 지지하고 교육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주요 부분별, 주요 대상별 사고예방 전략을 제고하는 일이다. 특히 교통, 화재 등 기존의 국내 사고예방 전략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험 집단을 위한 사고예방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로는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을 육성하는 일이다. 사고예방 리더십을 실현해보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 영향력 있는 지위를 지닌 개인과 조직을 장려하고 육성하며, 사고예방 리더십을 실현해보이기 위해 지역 내 관련기관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고예방 우선권에 초점을 두고 전체를 대표하는 전략의 조정을 이끌어가는 특정 정부기관들을 확실히 함으로써 리더십을 제공하고, 사고예방 책임을 지닌 기관들의 수행 측정과 함께 그들의 책임성을 문서로 확실시킬 필요가 있다.

5. 추진방안

1) 아동 안전관련 법, 제도의 통합화와 규제 강화

아동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를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기도 적용할 수 없게 애매한 아동안전 관련법들을 통합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한다.

2) 아동안전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과 중복과 혼선 조정

대전광역시에 아동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라인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 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및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한다.

3) 아동대상 안전사업 확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동대상 안전사업을 전개하고 확산해 나간다. 중앙정부의 아동안전정책을 기반으로 대전 지역 실정에 맞게 아동안전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시대의 변화와 아동발달에 따른 안전 환경 조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변화 및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을 활용한다.

5) 홍보강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인 아동안전 공익광고와 캠페인

페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반영한다. 또한 대전시에서 아동안전 주간을 선포하여,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운동을 통한 시민참여형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방식 또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 아동, 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아동안전 교육에 있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일반시민, 교육기관 종사자 즉,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아동안전사고사례 수집을 위한 손상감시 시스템 구축

아동안전과 관련한 자료가 태반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8)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강화

어린이통학버스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에 따른 적절한 혜택(세제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9) 선진국 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추진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에 권장토록 하며,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10) 대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통한 사고예방법 홍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 대전서 발생한 중상이상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하여 「대전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교재를 제작하여, 학교와 가정에 전달해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취약지점 집중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일괄하여 정밀조사하고, 실제 사고사례와 연계시켜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구별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 구별로 40~50명씩 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된 강사들이 우리 지역을 순회하며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

1. 안전사고 zero화 인프라 구축

1) 대전지역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사업

- 성과목표

아동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 추진

- 구분 : 신규사업/ 전 연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내 아동안전에 관한 기초자료 산출 및 확보에 어려움
- 기초자료에 근거한 목표량 산출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아동안전 관리 필요성 제기

- 사업내용

- 지역민의 안전의식 수준 및 안전의 생활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정기적 조사·발표를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안전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함

- 추진 방법

- 지역민들에게 일상 삶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운동을 적극 보급한 후 지역민 스스로 실천으로 옮기도록 유도

- 안전을 생활화하는 운동의 실천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지역민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다 높여나감
- 우리 지역이 속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지수를 조사한 후 지자체별 안전지수 순위를 매겨 발표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안전지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의 정지선 준수율 · 안전띠 착용률 · 가정 내 소화기 비치율 · 차량 내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률 · 심폐소생술 실습능력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에 대한 양보 비율 · 가정 내 생활 안전 가족회의 개최 비율

● 추진 일정

- 안전지수 개발 완료
- 우리 지역민의 안전지수 조사·발표
- 2차 안전지수 조사·발표
-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지수 조사·발표

● 소요 예산 : 2,000만원

- 안전지수 개발비(대전발전연구원 정책과제 비용으로 충당)
- 1,2,3차 조사비, 분석 비용
- 안전지수를 높이려는 제반 캠페인 실시 비용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지역 어린이 안전관련 지수 생산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가능
- 지역 어린이 손상지표로 활용

<표 45> 대전지역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10	5	5	5
		국비	-	-	-	-	-
		시비	-	10	5	5	5
		구비	-	-	-	-	-
성과			안전지수개발 및 조사	안전지수조사 및 분석	안전지수조사 및 분석	안전지수조사 및 분석	

2) 안전사고 Zero화 Idea 공모전 (프랑스 라벨비 제도)

● 성과목표

자기주도적 안전교육 참여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감축

● 구분 : 신규사업/초·중등 재학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전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인 필요성 제기
- 프랑스 라벨비 제도의 검증된 효과성 지역 적용

라벨비 제도

프랑스에서 청소년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공모를 하여 청소년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후 우수한 아이디어를 청소년들과 함께 펼쳐 시행 첫 해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24%나 줄임

● 사업내용

-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심각성, 구체적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충분히 홍보한 후 지역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Idea를 내도록 유도한 후 발굴된 Idea를 주민들과 함께 수행하며 우리지역의 안전사고를 줄여나감
- 1차로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Idea 공모내용」을 지자체·교육청·경찰서와 지역 언론 방송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 2차 사업으로 좋은 Idea 제공자에게 포상

- 3차 사업으로 좋은 Idea를 지역주민과 함께 수행하여 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감

● 추진 일정

- Idea공모전

- 포상

- Idea사업 공동 수행

● 소요 예산 : 약 2,000만원

- 대상 · 금 · 은 · 동상 등 수상 상금과 시상식 행사비용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지역내 초·중등생의 자발적 참여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가능

-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으로 정착

<표 46> 안전사고 Zero화 아이디어 공모전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 입	사업비 (백만원)	계	-	5	5	5	5
		국비	-	-	-	-	-
		시비	-	5	5	5	5
		구비	-	-	-	-	-
성과			Idea 공모	Idea 공모 및 관련사업 추진	Idea 공모 및 관련사업 추진	Idea 공모 및 관련사업 추진	

3) 안전사고 Zero화 민·관 협력 체계구축

● 성과목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의 파급성 및 효과성 제고

● 구분 : 계속사업/전연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총합적 노력 필요
- 관 주도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필요

● 사업내용

- 우리 지역의 민·관·기업·언론·종교조직 등 모든 지역민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Zero화하겠다” 는 각오로 안전사고 Zero운동 network를 구축한 후 각각의 활동 매뉴얼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수행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감

- 지역 내 약 100여개 기관·단체 등 참여단체간 network구축

· 관 : 대전광역시 · 국회의원 · 경찰서 · 의회 · 교육청 · 교통안전공단 등

· 민 : 녹색어머니회 · 모범운전자회 · 해병대 전우회 · 의용소방대 · 새마을봉사대 · YMCA · YWCA 등 제반 안전 관련 단체와 풀뿌리 시민단체 등

· 언론 : 중앙 언론 · 방송은 물론 지역 신문 · 방송 · 케이블TV 등

· 기업 : 삼성 · 현대 등 손해보험사 · 자동차 메이커 · 지방거주 제반기업들 등

· 종교단체 : 교회 · 천주교 · 불교 등 종교조직

· 사업용 단체 : 버스 · 택시 · 화물트럭 등 사업용 운수단체

· 공익단체 : 라이온스 · 로타리클럽 · 약사회 등 제반 단체

· 그 외 지역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단체

● 추진 방법

- 1차 상기 단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단체 간

network 구축

- 2차 상기 단체 기관장은 물론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각각 참여하는 단체·회원들에게 「안전사고 Zero 운동 활동 매뉴얼」제공
- 3차 각각의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에 맞춰 제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

● 추진 일정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network구축)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개최
-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에 맞춰 제반 사고예방 활동 수행

● 소요 예산 : 약 3,500만원

- 간담회, 선포식 행사비, 리플렛, 스티커 등 제반 제작비 등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성 증진
- 지속적인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안정적 기반으로 정착

<표 47> 안전사고 Zero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1	연차별 지원계획			
				2012	2013	2014	2015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5	10	15	5
		국비	-	-	-	-	-
		시비	-	5	10	15	5
		구비	-	-	-	-	-
성과			민관협력회의 구성 및 간담회개최	간담회 및 비전선포식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및 활동	안전사고 zero화 활동	

2. 어린이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1) 시민 안전 감시단 및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사업

- 성과목표

시민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감시단 활동 지원으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 감축

- 구분 : 계속사업/전연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안전 위협 요인의 확산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주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찾아 배제 시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감
- 양성인원 : 약 300명

- 추진 방법

-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 감시단원으로 참여 유도
- 소정의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시민 안전 감시단원으로 위촉
- 「시민 안전 감시단」발족식을 개최한 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개선해가는 활동을 수행

- 추진 일정

- 시민 안전 감시단원 참여 안내 및 시민 안전 감시단원 교육 및 감시단 발족식
-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
- 소요 예산 : 약 6,000만원
- 감시단원 양성 교육, 감시단 출범식, 제반 제보활동 비용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시민 안전감시단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사업 실행 가능
- 안전관리 사업에 시민참여 기반 구축

<표 48> 시민 안전 감시단 및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	15	15
		국비	-	-	-	-	-
		시비	10	10	10	15	15
		구비	-	-	-	-	-
성과			시민 안전감시단 운영	지속	지속	지속	

2) 안전 생활화 작은 실천운동 전개

● 성과목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 위해 요인 감축

● 구분 : 신규사업/전연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 성숙에 따른 시민 실천 캠페인 활성화 필요
- 자기주도적인 안전학습 문화를 지지하기 위한 지원활동 요구

(1) 세부사업 1. 비상구 찾기 운동

● 사업개요

- 지역 주민들이 노래방, HOF집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 시 비상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시 탈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운동

● 소요 예산 : 약 500만원

- 각 동별 비상구 찾기 운동 담당위원 임명 등 교육, 리플렛, 캠페인 등 제반 경비

(2) 세부사업 2. 생활 안전 가족회의 개최 운동

● 사업개요

- 일주일에 1회씩 온가족이 모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 사례를 소재로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가족이 동일 유형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지식습득과 예방대책을 논의

● 소요 예산 : 약 1,000만원

- 각 동별로 생활안전 가족회의 개최운동 담당위원 임명, 가족회의 개최 모범 사례 소개 교육, 리플렛 등 제반 경비

(3) 세부사업 3. 1가정 1구급 요원 확보 사업

● 사업개요

- 1가정에 최소한 1명씩은 인공호흡법, 심장압박법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응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불의의 사고에 대비

● 소요 예산 : 약 2,000만원

- 전 지역주민 대상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강사비 등 제반 경비

(4) 세부사업 4. 엄마·아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 올려주세요 캠페인

● 사업개요

-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평소 운전 습관을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안전운전 자가진단 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가 몇 점인지 진단한 후 각각 10점씩 올리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어감

안전운전 자가 진단 10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띠 착용 여부· 차량의 정지선 준수 여부· 음주운전 여부·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 켜는지 여부·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양보운전 여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여부· 과속, 난폭운전 여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여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여부

● 소요 예산 : 1,000만원

- 구역 내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자가진단 표 배포, 자가 진단 유도
- 모든 사업용 자가용 운전자 교육 시 자가진단 후 10점 상승 캠페인 전개

(5) 세부사업 5. 우리 가족의 교통사고 Zero운동 실천 10척 보급

● 사업개요

-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족이 반드시 지켜야할 교통사고 Zero운동 실천수칙을 만들어 모든 가정에 보급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함

교통사고 Zero운동 실천 10칙

-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으로 건너십시오
- 헤드레스트(머리받침대)를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 횡단보도서 보행자에게 손으로 양보표시를 해 주세요
- 내 자녀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가지 습관을 길러주세요
-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행위입니다
- 우리 자녀는 엄마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려주세요
-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려주세요
- 하루에 10번씩 양보 하세요
-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 하세요

● 소요 예산 : 약 2,000만원

- 구역 내 모든 가정에 교통사고 Zero운동 실천 수칙 리플렛 제작, 보급 비용
-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육 및 제반 캠페인 등 제반 비용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안전문화 작은 실천운동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는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
- 안전관리 사업에 시민참여 기반 구축

<표 49> 안전 생활화 작은 실천운동 전개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 입	사업비 (백만원)	계	-	65	50	50	50
		국비	-	-	-	-	-
		시비	-	65	50	50	50
		구비	-	-	-	-	-
성과			안전문화 교육 지원 안전문화 수칙 보급	안전문화 교육 지원 안전문화 수칙 보급	지속	지속	

-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 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발생한 사고
- 큰 차가 회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 안전띠,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치 않아 발생하는 사고
-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교실 <자전거 운전면허 10가지 실기 코스>
 - 출발
 - 우회전
 - 똑바로 직진
 - 언덕 오르기
 - 횡단보도 건너기
 - 킥 옮기기
 - 좌회전
 - 뒤쪽 확인
 - 지그재그 가기
 - 도착
- 물놀이안전 체험교실
 - 낮은 물, 중간 물, 깊은 물을 만들어 놓은 후 실제 물놀이 하다 발생한 사고 사례 장면을 직접 체험하며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알려줌
 - 물에 빠졌을 때 PET병, 혁대, 긴 막대기, 바지 등을 활용한 구조법 실연
- 화재안전 체험교실
 -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한 후 대피하는 방법, 119에 신고하는 방법, 몸에 작은

불이 붙었을 경우 대처방법, 소화기를 사용해 직접 불 끄는 체험 등을 실시

- 학교안전 체험교실

- 학교에서 청소하다 발생한 추락사고 등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 모의 실험도구를 활용해 직접 사고사례를 체험하여 예방법을 알려줌

- 유괴예방 체험교실

- 실제로 유괴범이 어린이 유괴 시 가장 잘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을 연출하여 어린이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하는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 알려줌

- 가정안전 체험교실

-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사례 모의 모형을 설치한 후 직접 실습

- 전기, 가스안전 체험교실

- 가정에서 왜 전기, 가스 사고가 발생하는지, 가스누출 시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등 실제 발생한 전기, 가스 사고의 재연을 통해 사고 예방법을 알려줌

- 질식, 중독 예방 체험교실

- 어린이들에게 질식,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들을 살펴보고 실제 발생한 질식, 중독사고 사례의 실험을 통해 사고예방법을 알려줌

- 지진, 재난예방 체험교실

- 지진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과 실제 위험대피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시 긴급대피방법을 습득함

- 낙상예방 체험교실

- 실제 아파트에서의 추락사고 사례와 계단에서의 낙상사고사례 등의 실험을 통해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알려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 실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시 신고방법, 뱀·벌레에 물렸을 때 대처방법 등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인공호흡법, 심장압박법 등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함

● 소요 예산 : 약 3억 원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비
-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장 조성비
- 제반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체험시설 구입비 등

● 기대효과/향후 고려사항

- 대한민국최초, 세계최초로 우리지역에 어린이 안전체험학교가 조성되어 우리 지역 내 어린이는 물론 인근 지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크게 기여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 방법을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가능
- 우리지역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학교가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은 물론 Safe Kids Worldwide Conference 조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안전 체험 학교를 확산

<표 50> 어린이안전체험학교 조성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10	300	100	50	50
		국비	-	200	-	-	-
		시비	10	100	100	50	50
		구비	-	-	-	-	-
성과			안전교실 조성	교육 실시	교육 실시	교육 실시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1) 스쿨존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 성과목표

기존 스쿨존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 증진, 예산 효율적 사용 기반 구축

- 구분 : 신규사업/전연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쿨존 지정 및 조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증대됨
- 지속적인 스쿨존 운영을 위한 상시적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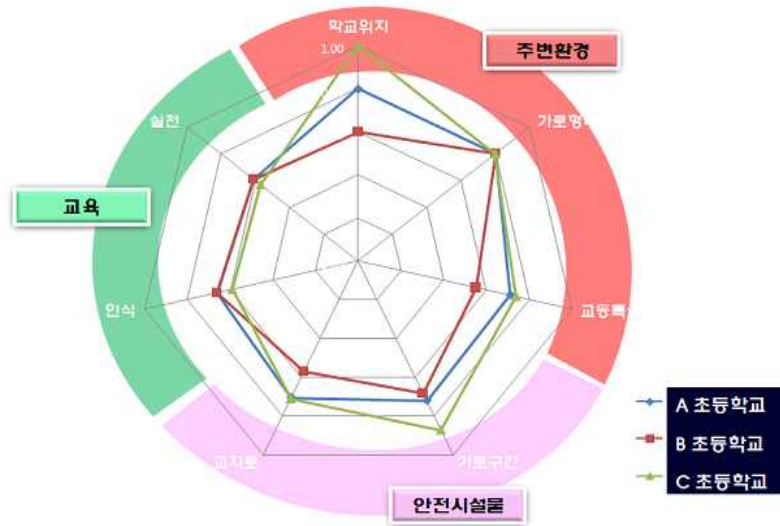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기존 조성된, 향후 조성될 스쿨존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스쿨존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보다 높이고 동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코자 스쿨존의 안전성을 환경적 측면 • 시설물 측면 • 교육적 측면으로 3분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 3개 측면에서 안전성 평가 방법

- 환경적 측면 : 학교 위치, 노상도로 특성, 교통 특성으로 나눈 후 다시 각각 세분하여 안전성을 점수화 함
- 안전시설물 측면 : 가로구간과 교차로 구간으로 구분 한 후 다시 집중관리, 일반구간으로 재구분하여 이 구간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안전시설물,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안전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지표로 선정

● Spider-map 안전성 평가 모델 사례



<그림 60> Spider-map 안전성 평가 모델 사례

● 소요 예산 : 6,000만원 (학교 당 200만원)

- 통학로 위험도 실태조사, 사고사례 조사, 어린이, 학부모, 운전자, 설문조사비, 안전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제 어린이와 운전자의 행태 분석 등

● 기대 효과

- 실제 스쿨존 내 사고사례와 안전시설 부재와 인과관계 규명하여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안전시설 설치 가능
- 스쿨존 개선 학교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가능
- 「안전성 평가모형」을 활용, 개별 학교별 사고 취약지점 찾아 집중 보완하여

맞춤형 스쿨존 개선 사업 가능

- 예산의 중복 투자 낭비를 배제하여 효율적 사용
- 보행 중 사망 대폭 감소 가능
- 향후 스쿨존 개선완료 학교 보완 작업 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 보완가능

<표 51> 스쿨존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60	60	60	60
		국비	-	30	30	30	30
		시비	-	30	30	30	30
		구비	-	-	-	-	-
성과			스쿨존 개선 학교 선정 및 시설 기준 마련 모니터링	모니터링 실시 개선안 마련	모니터링 실시 개선안 마련	모니터링 실시 개선안 마련	

2) 선진국형 walking school bus 운영사업

● 성과목표

초등학교 등하교시 자원봉사 동반자를 지원하여 통학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구분 : 신규사업/초등학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형 walking school bus 도입의 효과성 검증, 확대 시행 필요

walking school bus 제도

초등학교 등·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이 홀로 보행하지 않고 훈련되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아래 집단 보행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된 통학로에 일정 간격으로 정류장을 설치 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를 등교 시 데려오고, 하교 시 데려다 주는 안전한 등하교 기법을 의미

- 대전형 walking school bus 운영 방안 마련 시급

● 사업 내용

- 어린이 보호의식이 강하고 잘 훈련되어진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주는 물론 실제 도로상에서 안전한 횡단방법 등을 직접 실습교육을 함으로써 등·하교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예방
- 등하교시에 안전한 도로횡단방법을 교육받을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이 몸에 습관화되어 등하교와 무관하게 홀로 도로 횡단 시에도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 주는 등 전체적으로 교통사고위험을 낮춤

● 사업 대상 : 지역 내 초등학교 10개교

- 실시기간 : 6월 1일~12월 31일
- 어린이 안전지도위원 : 녹색어머니회원 등 학교별로 10명씩 양성
- 실시 방법
 - Walking School Bus를 실시할 학교의 통학로 위험도 실태조사를 실시
 - 통학로의 정문, 후문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지도를 그림
 - Walking School Bus의 실시구간과 버스 정류소 위치 및 등하교 도착 시간을 정함
 - 노선별 훈련 받은 자원 봉사자와 노선 이용 어린이들의 현황을 파악
 - 자원 봉사자의 어린이 교육 내용과 Walking School Bus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
- 워킹스쿨버스 활동지침
 - 한 개 노선별 보행 어린이는 큰길 중심으로 10명 선으로 함
 - 한 개 노선에 정류장 수는 5~6개
 - 어린이는 2줄로 세우며 어린이 안전 지도위원은 앞, 뒤에 배치
 - 이면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법을 어린이들에게 알림
 - 길을 건널 때 3~4줄로 서며 길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우측통행의 안전성, 손드는 이유와 손드는 올바른 방법, 운전자와 눈 맞추기 등을 교육
 - 각 노선의 정류장별 등·하교 도착시간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에게 알림
 - 월별 버스 승차권을 나누워 주고 등·하교 시 편치를 뚫어 Walking School Bus를 이용했음을 표시
- 소요 예산 : 약 3,000만원
 - waling school bus 지도위원 양성 및 활동 비용

- 총 10개 학교 시범운영 × 300만원

● 기대 효과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특히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여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동 제도를 실시한 후 등·하교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사고 감소효과가 크며,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큼
- 집단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우측통행의 안전성, 손을 드는 이유와 손드는 올바른 방법 등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을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어린이들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줌
- 동 제도를 실시하면서 자원봉사자, 학교, 경찰서, 해당 구청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지자체, 경찰, 정부가 보다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만듦

<표 52> 선진국형 walking 스쿨버스 운영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30	30	30	30
		국비	-	15	15	15	15
		시비	-	15	15	15	15
		구비	-	-	-	-	-
성과			자원봉사 모집 시범학교 사업 추진	지속	지속	지속	

3) 선진국형 Safety Village 조성사업

- 성과목표

Safety Village 조성 및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 구분 : 신규사업/유치원·초등학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전체험 마을 조성을 통한 안전체험교육 강화 필요
- 대전교통안전체험센터 기능을 체험위주로 강화하는 한편, 폐교를 활용한 안전 체험 교육 활성화 필요

- 사업내용

- 일정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사례들을 직접 지역민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Safety Village 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반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줌

- 선진국의 사례



- 캘리포니아 Safety Village

- 마을의 구성요소를 1/3 축소
- 어린이 안전교육, 모터사이클교육, 심폐기능 소생 및 긴급구조교육 실시



- Chatham-Kent Children's Safety Village

- Police 안전 : 자전거 안전, 보행자 안전, 스쿨버스 안전, 실제 연습, Emergency 911, 보행 안전 등

- Fire 안전 : Smoke Alarms, 주방 안전, 탈출 Planning

- 수상안전 , 겨울철 빙상안전

- 전기안전 : 가전제품, 가정안전



- Iowa City Safety Village

- 5-7세 어린이 대상 안전 캠프 개최

-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습득

- 실제 교통사고 사례 중심 체험교육 실시

- 911 신고하는 방법 등 교육

- 화재 사고 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



● 소요 예산 : 약 3억 원

- 제반 안전사고 사례 체험시설 조성 비용

● 기대 효과

- 대전교통안전체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폐교를 활용하여 실효성있는 안전체험 교육 실시

-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으로 안전생활화, 안전사고 예방 가능

<표 53> 선진국형 safety village 조성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200	100	50	50
		국비	-	100	50	25	25
		시비	-	100	50	25	25
		구비	-	-	-	-	-
성과			안전사고 체험시설 조성	안전사고 체험시설 조성 안전체험교육	안전체험교육	안전체험교육	

4)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 성과목표

미취학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화 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구분 : 신규사업/미취학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취학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체험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수여부를 인증할 필요성 대두

- 사업내용

-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 인증원을 받은 후 초등학교 입학 시 안전교육 인증원을 학교에 제출토록 하는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시스템

- 사업 목적

- 5~7세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안전교육 인증원을 받은 후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을 우리도 실시하여 미취학 어린이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낮춰줌

- 교육 대상 : 1차 5~7세 미취학 어린이와 2차 초등학생

- 교육 방법 : on-off line을 통해 병행 교육

● 교육 내용

- 실제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사례중심 교육

● 인증원 취득 방법 : 소정의 교육 후 시험 합격 시 안전교육 인증원 제공

● 소요 예산 : 약 3,000만원

- 지역의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와 부모 대상 안전교육

● 기대 효과

- 미취학 어린이를 둔 부모님에게 내 자녀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함

-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님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하여 어린이들에게 동일유형의 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어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표 54>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2	연차별 지원계획			
				2013	2014	2015	2016
투입	사업비 (백만원)	계	-	30	30	50	50
		국비	-	30	30	30	30
		시비	-	-	-	20	20
		구비	-	-	-	-	-
성과			인증환경조 성	인증시행	인증시행	인증시행	

제 6 장

결론

제1절 조직적 측면의 정책 제언

제2절 예산 측면의 정책 제언

제3절 사업 측면의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조직적 측면의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에 기반하여, 관련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에 의한 종합적 대응방안에 의하여 사고의 예방과 사고율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하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형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은 대전 시장 직속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위원회」를 구성한 후 외부 명망인사와 함께 시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관내 민 · 관 · 기업 · 언론 · 시민 단체장이 모두 다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칭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위원회의 산하에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전시 유관 실무 국장들과 상기 참여 단체들의 실무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매 월 1회씩 대전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논의 · 집행하는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대전시 조직에 어린이 안전팀을 구성하여 최소한 3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담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예산적 측면의 정책 제언

2011년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나타나 있듯이, 향후 어린이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핵심 이슈로써 뿐만아니라 정책적 핵심과제로 자리잡아 갈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대전을 어린이 안전 시범도시」로 선정토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후 최대한 많은 어린이 안전 예산을 지원 받는 전략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전시 자체예산 편성 시 어린이 안전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앞서 제안한 중점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에 꼭 수행해야 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하여 동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사업적 측면의 정책 제언

앞서 제시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순차적 추진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최근 5년간의 중상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정밀 사례 분석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가정과 학교에 제공하여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한다.

둘째, 2013년에 「선진국 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과 각 구별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활용사업」「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추진사업」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꾸준히 줄여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다.

셋째,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전 시민들의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대전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

네 번째, 기존 스쿨존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 등을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단, 평가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나가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 매년 12월 「어린이 안전 대상 시상식」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데에 대한 격려와 활동 내용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사람,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 고 문 헌

- 권기창외. 2006 .아동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한국생활안전연합.
- 김승권의. 2008.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준. 2007.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한국시정개발연구원.
- 김신정. 2001.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 아동간호학회
- 김영한 외. 2009.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혜 외. 2007. 경기도 신도시 설계모형(안): 여성친화적 접근.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김홍순. 2007. 비성별적 도시의 모색 :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국토계획] 42권 1호.
- 노정근. 1998. 학교안전과목 교육과정과 안전사고실태에 관한 고찰: 경기도 안전공제회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지, 2(1), 5-15.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박영신. 2003.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 89-105.
- 송현중. 2006.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9-98.
- 심영희. 1998.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 연구, 5(3), 15-145.

- 안상수 외. 2009.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덕경 외. 201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3) : 여성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외.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2):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재열(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사회적 안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선화. 2003. 아동사고 사망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혜 외. 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2005. 손상감시정보
- 최인섭. 2011. 지속가능한 Wee프로젝트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제언, Wee 뉴스레터 9월호,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pp.2-4.
- 한국소비자원. 2007.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 2007.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팀.
- 한국행정연구원. 2008. 『사회위험 요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 허정택. 2007.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어린이안전토론회, 한국소비자원.
- Robert, H. & S. Jorgensen. 2006.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4): 529-556.
- Sleet, D. Bonzo, & Branche, C.(1998). An Overview of the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a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4, 308-312.

부록 : 설문지

ID			
----	--	--	--

안녕하십니까?

대전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은 현재 대전광역시의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과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어린이 안전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견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원 전략 수립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기준일은 2012년 8월이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자	연구위원 박노동(530-3523)

거주지	
면접일시	
조사자	

I. 응답자 일반사항 / 안전사고 경험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2. 귀하의 성별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18세 미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총_____명), (____남 ____녀)

재학상황	연령	성별	인원
미취학자1			
미취학자2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 귀하의 자녀가 지난 3년간 아래와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있다'에 없으면 '없다'에 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있다	없다
4-1	교통사고	①	②
4-2	가정 내 안전사고	①	②
4-3	수상사고	①	②
4-4	추락사고	①	②
4-5	학교 내 안전사고	①	②
4-6	화재사고	①	②
4-7	전기감전사고	①	②
4-8	놀이터 사고	①	②
4-9	자전거, 인라인 등 사고	①	②
4-10	음독, 중독, 질식사고	①	②
4-11	범죄 피해 사고	①	②

5. 최근 3년 이내 사고의 발생 이후 실시한 조치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119에 신고했다
- ③ 학교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 ④ 가족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다
- ⑤ 자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⑥ 기타 (무엇:_____)

II. 안전에 대한 인식도

6.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3순위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국가안보(전쟁, 북핵 문제 등)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등)
-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 ⑤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조류 독감, SARS등) ⑥ 범죄발생(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 ⑦ 기타(무엇:_____)

7. **어린이 안전사고 중 가장 불안한 사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사고 ② 화재·전기 사고 ③ 물놀이 사고
- ④ 전기·폭발 사고 ⑤ 학교·가정 안전사고 ⑥ 각종 범죄사고

8.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약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8-1.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에 대해 불안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
- ② 급식 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때문
- ③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때문
- ④ 실제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
- ⑤ 급식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하기 때문
- ⑥ 기타(무엇:_____)

9.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여건 중 아래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귀하의 자녀를 옆두에 두시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9-1	자연재해 (태풍, 지진 등)	①	②	③	④	⑤
9-2	건축물 및 시설물 (주택, 교량 등)	①	②	③	④	⑤
9-3	교통사고 (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①	②	③	④	⑤
9-4	화재(산불 포함)	①	②	③	④	⑤
9-5	환경안전 (대기,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방사능 노출 등)	①	②	③	④	⑤
9-6	식품 (급식위생, 식중독 등)	①	②	③	④	⑤
9-7	정보보안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해킹 등)	①	②	③	④	⑤
9-8	신종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 등)	①	②	③	④	⑤
9-9	범죄 위험 (폭력, 강도, 유괴 등)	①	②	③	④	⑤

10.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운전자의 부주의 ② 보행자의 부주의 ③ 교통 혼잡
 ④ 도로 구조의 문제 ⑤ 교통 신호체계의 문제 ⑥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⑦ 기타(무엇:_____)

Ⅲ. 안전사고 예방

1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잘 아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안다

12.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② 잘 시키는 편이다 ③ 교육을 하지 않는 편이다
④ 그 동안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13.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인공호흡법, 심장 압박법 등 어린이 긴급사고시 심폐 소생술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15. 부모로써 자신이 안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 ②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다
③ 안전의식이 없는 편이다 ④ 안전 의식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6. 횡단보도는 어느 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왼쪽 ② 가운데 ③ 오른쪽 ④ 대각선 ⑤모른다

IV.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대책

17. 현재 어린이 보행 시 경험하는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릴 때부터 실제 사고 사례중심의 체험교육 실시 ② 교통안전 시설의 대폭 확충

- ③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
- ④ 운전자 스스로 방어·안전운전 하도록 교육·계몽 ⑤ 기타(무엇_____)

19. 귀하께서는 현재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19-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19-2번으로 가시오)

19-1. 이용하고 계신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명칭을 모두 적어주세요.
(_____)

19-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몰라서 ② 필요가 없어서 ③ 거리가 멀어서 ④ 비용 때문에
- ⑤ 자격이 안돼서 ⑥ 시간이 없어서 ⑦ 기타(무엇_____)

20.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대상 & 이용절차를 안다	세부 내용을 안다	조금 안다	이름만 안다	전혀 모른다
20-1	어린이 실종신고 번호	①	②	③	④	⑤
20-2	미아 찾기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0-3	부모 아토피 관리 교실	①	②	③	④	⑤
20-4	친환경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20-5	스쿨 푸드존	①	②	③	④	⑤
20-6	불량식품 감시단	①	②	③	④	⑤
20-7	어린이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①	②	③	④	⑤
20-8	어린이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0-9	고당식품 알리미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0-10	스쿨존	①	②	③	④	⑤
20-1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0-12	놀이시설 안전 기준	①	②	③	④	⑤

21. 지역사회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대전광역시 ③ 각 구청 ④ 학교

- ⑤ 가정 ⑥ 어린이 이용시설 ⑦ 시민단체 ⑧ 기타(_____)

2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②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③ 손상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
 ④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처벌 강화
 ⑤ 기타 (무엇:_____)

23. 대전광역시가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②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③ 화재(산불 포함)
 ④ 정보보안(바이러스, 해킹 등) ⑤ 환경안전(대기, 수질오염 등) ⑥ 식품(급식위생, 식중독 등)
 ⑦ 신종 전염병 ⑧ 교통사고(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⑨ 각종 범죄 ⑩ 기타(무엇_____)

24. 어린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프로그램 중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개를 선택하시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②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 ③ 안전 설비 설치 및 점검
 ④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⑤ 지역 내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⑥ 아동제품 안전기술 지원
 ⑦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홍보 확대 ⑧ 자전거 안전교육

25.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다음 프로그램 중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개를 선택하시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③ 교통안전 교육 기반 강화
 ④ 아동안전체험차량 운영 ⑤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 ⑥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⑦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⑧ 어린이놀이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⑨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⑩ 어린이 먹거리 감시단 운영

26.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프로그램 중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개를 선택하시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 | ② 배움터 지킴이 사업 | ③ 학교 내 CCTV설치 |
| ④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 ⑤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 구축 | ⑥ 가정, 성폭력, 성매매 방지사업 |
| ⑦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 ⑧ 아동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

27.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프로그램 중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개를 선택하시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 ② 안전교육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교육 활성화 |
| ③ 아동전용 손상병원 지정 운영 | ④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 |
| ⑤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 |

28. 기타 어린이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로 살겠습니다.

기본연구보고서 2012-14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디자인크로스 TEL 070-4216-9392

ISBN : 978-89-981543-3-2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